

K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I

손기태 · 백유진 · 김민희

E



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협력팀,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국제개발협력센터(개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등에 반년간 『대외경제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院長 蔡旭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

연구자료 10-06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손기태 · 백유진 · 김민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인쇄일 2010년 10월 1일

발행일 2010년 10월 8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주)현대애드컴 ☎ 02-2275-8125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179-3 94320

978-89-322-2064-2(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손기태 · 백유진 · 김민희

---

우리 정부와 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과거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 역사 중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정치 및 경제 변화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3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정치 변화를 개관하면서 같은 기간 일어난 경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이 기간 정치 변화는 대략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로 이어지는 혼란기 이후 2004년 유도요노의 대통령 취임과 2009년의 재임으로 연결되는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헌법개정, 지방분권, 분리독립운동, 테러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4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을 서술한 후 경제 부문 중 은행, 노동법, 부패 부문에서 이루어진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한다. 은행부문의 대출자산이 부실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IBRA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초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압박의 우려가 높았지만 추후

유가 상승 호재로 재정압박의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그러나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정부은행이 파산 또는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화하여 구조조정은 완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IBRA가 조기해체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시 경험한 지불인출쇄도를 방지하고자 예금보험을 설립하였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노동법 13/2003을 중심으로 친근로자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노동법 자체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운용에서 얼마나 친근로자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6년 경제계가 이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노동법은 실질적인 운용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친근로자적이라고 판단된다. 친근로자적인 노동법 외에도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에 비해서 그다지 낮지 않고 평균임금보다 빠르게 성장한 점에서도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점차 친근로자적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총 근로인구의 1/3만이 노동법과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노동제도가 총 근로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부패척결은 하비비 정권부터 논의되어 왔고 산발적으로 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이 처벌되었다. 그러나 부패척결을 본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인물은 유도요노이고, 유도요노가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부패척결은 관련인물 처벌에 머물렀을 뿐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장치는 미비하다. 단, 최근 부패방지를 위해서 회계제도가 개선되고 공무원의 임금이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도네시아의 부패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 장의 내용에 기초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진출방안을 간략히 고려해 본다.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1
.....	
제2장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14
.....	
1. 경제규모 및 성장	14
가. 경제규모	14
나. 경제성장률	15
다. 산업구조	17
라. 물가상승률	18
2. 재정수지	19
3. 대외경제	20
가. 무역의존도	20
나. 교역구조	21
다. 외국인직접투자	24
4.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25
가. 교역관계	25
나. 투자관계	28
5. 소결	29

제3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 30

---

1. 정권의 등장 및 퇴진	30
2.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체제 재정비	33
3. 지방분권화와 부패문제	36
4. 분리독립운동의 진행	38
5. 테러와 국가안보 실태	39
6. 소결	41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변화 43

---

1. 외환위기 직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43
가. 외환위기 시작	43
나. 초기 외환위기 대응	44
다. 초기 외환위기 대응 실패	46
라. 외환위기 심화	47
마. 통화가치와 주가 변동을 통해 본 외환위기의 심각성	48
2. 은행부문 구조조정 진행	52
가. 초기 정책	52
나. IBRA 설립	53
다. 국채발행	55
라. 재정압박	57
마. IBRA 운영의 어려움	58
바. IBRA 조기 해체	59
사. 예금보험	60
3. 노동법의 변화	62
가. 외환위기 이전 노동법 운용	62
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근로자권리 향상	63

다. 노동법 13/2003	64
라. 노동법의 친기업적 개정 움직임과 실패	66
마.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	67
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악영향	68
사. 지방분권하의 최저임금제	70
아. 기타 노동 관련법	71
4.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71
가. 인도네시아의 부패 정도	71
나. 수하르토 집권 시 부패	74
다.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	75
라.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척결 방안과 한계	76
마.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77
바.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79
5. 소결	82
제5장 결 론	83
.....	
참고문헌	89
.....	
Executive Summary	95

## 표 차례

표 2-1. 인도네시아 국별 교역액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23
표 2-2. 한국의 대ASEAN 주요국 실질 수출입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26
표 2-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	27
표 2-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28
표 3-1. 1945년 헌법 개정 전후 비교	33
표 3-2. 지방분권화 관련 법률	37
표 4-1. 1998년 2월 말 인도네시아 외채	48
표 4-2. 1997년 7월 1일~1998년 9월 15일 주식가치 손실 측정	50
표 4-3. 은행부문 손실	56
표 4-4. 은행부문 손익계산서(1998년 7월~1999년 9월)	56
표 4-5. 2000년 9월 11개 주요 자본 재구성된 은행	58
표 4-6. 2000년 12월 IBRA의 추정된 자산가치와 회수율	58
표 4-7. 단계적인 최대 예금자보호 한도 감액	61
표 4-8. 동남아시아 몇 개국의 고용 및 해고 지수 비교(2006년)	65
표 4-9. 2006년 2월 투자환경개선 패키지 중 노동정책	66
표 4-10. 2006년 기업인의 노동법 개정 요구안	67
표 4-11. 최저임금산정기준과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70
표 4-12. 부패인식지수	72
표 4-13. 생산비용 대비 뇌물의 비율(2001년)	73

## 그림 차례

그림 2-1. 주요 ASEAN 국가의 실질 GDP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15
그림 2-2. 주요 ASEAN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6
그림 2-3.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17
그림 2-4.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 추이	18
그림 2-5.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통화량 증가율 및 환율	19
그림 2-6. ASEAN 주요국 GDP 대비 재정수지	20
그림 2-7. 1990년과 2008년 주요 ASEAN 국가의 무역의존도	21
그림 2-8. 인도네시아 실질무역수지 및 실질경상수지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22
그림 2-9.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995~2008년, 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24
그림 2-10. 국별 ASEAN 및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2000~08년)	25
그림 4-1. 인도네시아 소비자물가지수와 시중금리 추이(1997~98년)	45
그림 4-2. 인도네시아 루피아환율과 주가지수 추이(1997~98년)	47
그림 4-3. 루피아 가치 변동 추이(1997~99년)	49
그림 4-4. 인도네시아의 위상별 고용구조 추이	69

## 글상자 차례

---

글상자 1. 인도네시아 테러 일지	41
글상자 2.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인도네시아 내 주요 사건	51
글상자 3. 신투자법의 주요 내용	87

# 제1장

---

## 서론

2008년 ASEAN의 명목 GDP가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체제가 되었으며, 같은 해 우리나라와 ASEAN 간 교역규모는 7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두 지역의 대외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ASEAN 2010). 특히 2009년 6월 우리나라와 ASEAN은 한·ASEAN 투자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ASEAN FTA를 완결하면서 두 지역 간 교역규모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ASEAN의 대외경제관계가 크게 진척되면서 ASEAN 내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두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2008년 실질 GDP 2,20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같은 해 인구도 약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며 대규모 잠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다.<sup>1)</sup> 경제 및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2008년 말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8년 6.1%, 2009년 4.5%를 기록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의 밝은

---

1) 자료 출처는 2장 참고.

경기 전망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최근 인도네시아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유도요노가 평화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9년에도 선거 절차와 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 선거 결과를 고려할 때 수하르토의 32년 장기집권과 뒤이은 6년간의 정치적 혼란 후 인도네시아에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정치가 발전하면서 우리정부와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G20 회원국으로서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증가하는 관심에 부응하여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 역사를 개관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으로 이 위기 이후 단행된 개혁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에 상당부분 큰 영향을 주었고 이 영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도네시아 경제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역사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정치의 역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종합한 자료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Arndt, Hill(1999)이 편집한 책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교훈에 내용을 국한하였다. 또한 Geoff(1999)가 편집한 책은 수하르토 정권 몰락 직후 정치상황에 Manning, van Diermen(2000)이 편집한 책은 수하르토 정권 몰

---

2) 자료는 IHS Global Insight이고 2009년 수치는 추정치이다.

락 직후 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도네시아 경제사의 입문서의 역할을 하는 Hill(2000)의 책은 1966년, 즉 수하르토 집권 후 금융, 재정, 무역, 공공정책, 농업의 근대화, 광공업, 서비스, 빈곤, 소득불평등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지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변한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Cribb, Brown(1996)은 Hill(2000)보다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45년부터 아시아외환위기 직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해서 개관하고 있고, Dick, Houben, Lindblad, Wie(2002)는 1800년까지 연구대상 시기를 거슬러 올라갔지만 2000년에 경제사 추적을 멈추고 있어서 다른 여러 문헌과 마찬가지로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변화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이해한다. 본 연구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3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를 개관한 후 4장에서는 경제,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에서 발생한 변화 중에서 중요하고 크게 바뀐 금융, 노동, 부패 부문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 및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진출할 분야를 탐색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제2장

##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본 장에서는 다양한 거시지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3~4장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정치 및 경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 경제규모 및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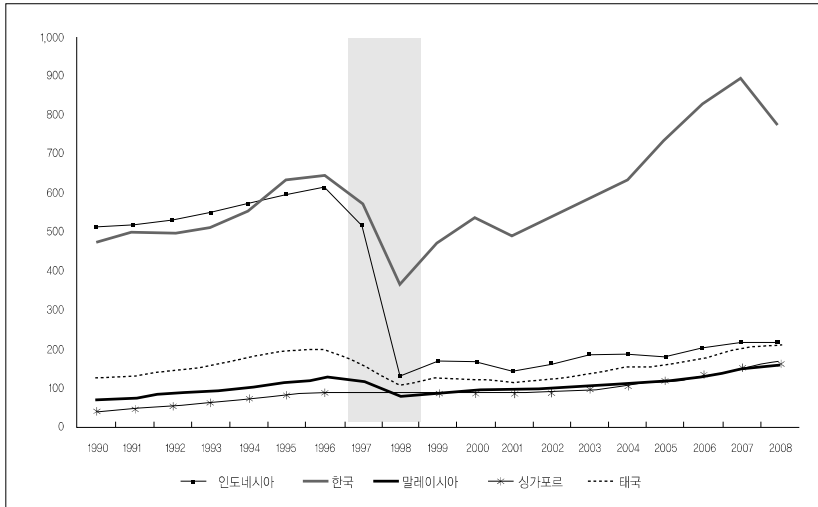
#### 가. 경제규모

2008년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는 2,20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크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실질생산액이 이전의 1/4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ASEAN 경제의 12.3%를 구성하면서 이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 참고). 반면,

이와 같이 높은 총생산액에도 불구하고 2억 4천만 명, 세계 4위<sup>3)</sup>의 많은 인  
구로 인해 1인당 GDP는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와 태국에 이어 5위에 그친다.

■ 그림 2-1. 주요 ASEAN 국가의 실질 GDP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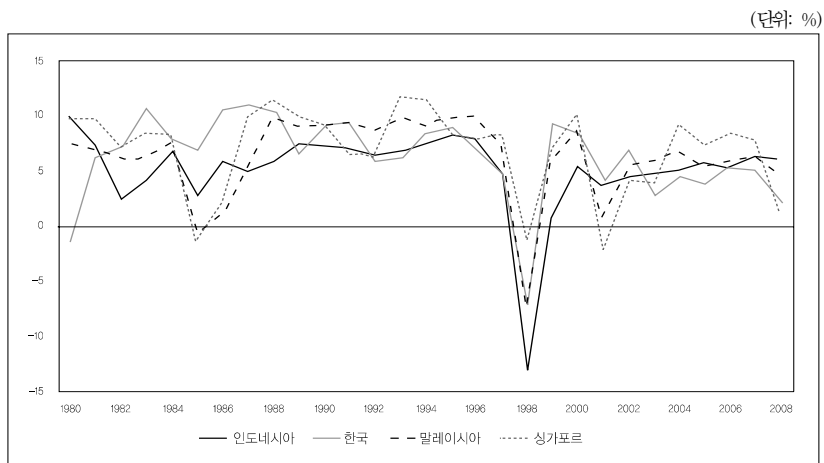
## 나. 경제성장률

인도네시아는 198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6까지 연평균 6%대의 고  
도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해 1997년 실질 GDP 성장률이  
4.7%로 하락하였고, 1998년에는 근래 가장 저조한 -13.1%를 기록하였다.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가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2 참고). 그러나 2000년 이후 경기가

3) CIA, World Factbook, 2009년 6월 추정치로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3위는 미국이다.

회복되어 2008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 수준의 높은 실질 GDP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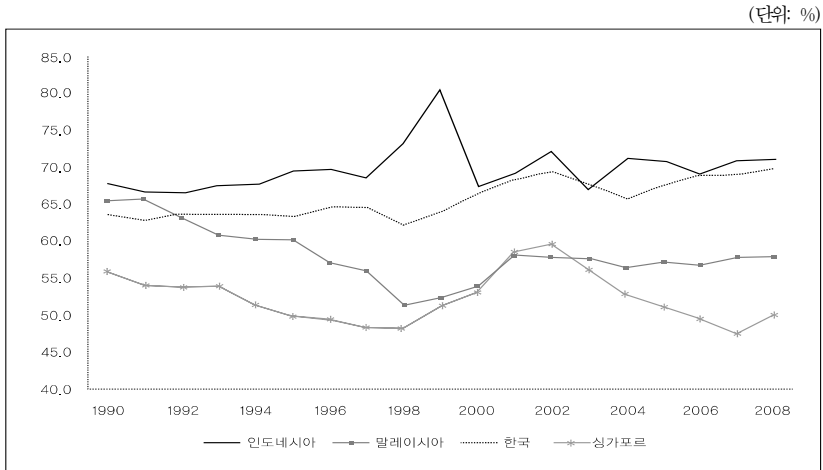
그림 2-2. 주요 ASEAN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IMF(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수출의존도이다. 세계 인구 4위라는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민간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민간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69.9%를 기록하였고 이 수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높다. 2008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이 미성숙하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미성숙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이번 세계경기침체로부터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금융부문이 반드시 성숙해야 할 것이다.

### 그림 2-3.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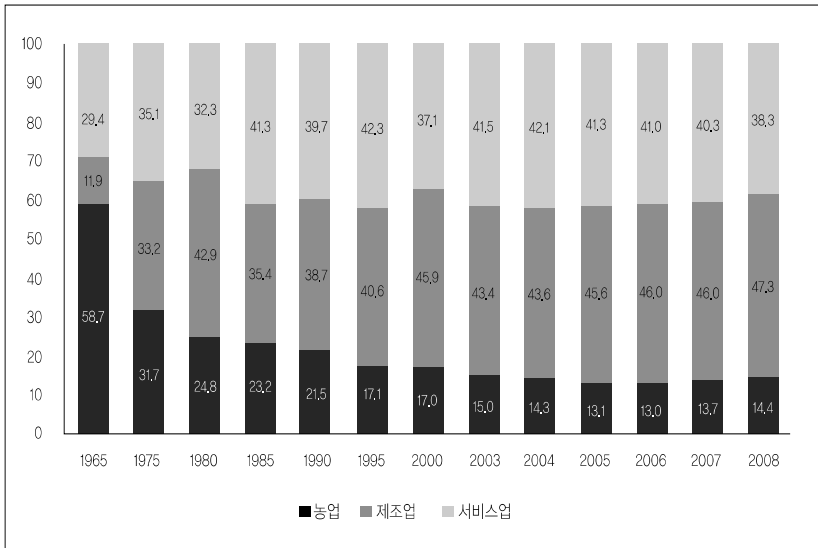
#### 다. 산업구조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1970년대 이전까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였다. 이후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제조업 비중이 농업을 추월하였고, 서비스업도 1970년대 이후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1965년 29.4%에서 2008년 38.3%로 약 10%포인트 상승하였다. 2008년에는 농업이 GDP의 14.4%, 제조업이 47.3%, 서비스업이 38.3%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2-4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GDP 대비 농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농업부문의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전체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아 2007년 전체 노동인구 중 4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13.4%가 종사하여 농업에 비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sup>4)</sup>

## 그림 2-4.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03~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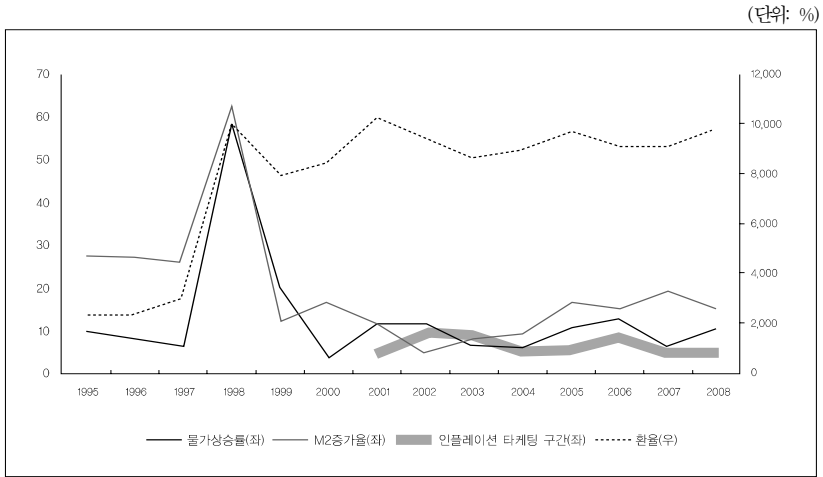
The Service Sector in Indonesia's National Accounts(1951~2000년).

### 라. 물가상승률

외환위기 당시 루피아 가치가 급락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 1998년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57.6%에 달하였다(그림 2-5 참고). 2000년 이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리조정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2009.

■ 그림 2-5.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통화량 증가율 및 환율 ■



자료: EIU, Data t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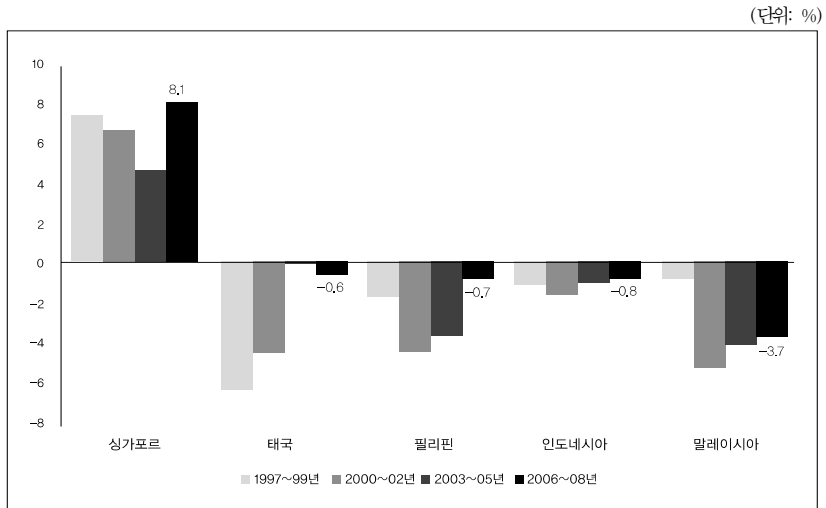
## 2. 재정수지

외환위기 직후, 이 위기로 인한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 및 유가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증가로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990년 후반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평균 -2.0% 이내로 한정되었다(그림 2-6 참고).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증가를 막기 위해 국민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두 차례 유류 보조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세수 증가로 재정수입이 예산보다 10% 증가하였고 유류보조금 지급이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가 0.1% 수준에 그쳤다.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광물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브루나이와 정부가 강제저축을 실시하는 싱가포르의 재정수지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양호하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부채 수준도 낮은 편에 속한다. 막

대한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으로 1997년 GDP 대비 정부부채가 72.5%까지 치솟았지만,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35.1%까지 하락하였다. 결국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평균 3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sup>5)</sup>

■ 그림 2-6. ASEAN 주요국 GDP 대비 재정수지 ■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09), Key Indicators.

### 3. 대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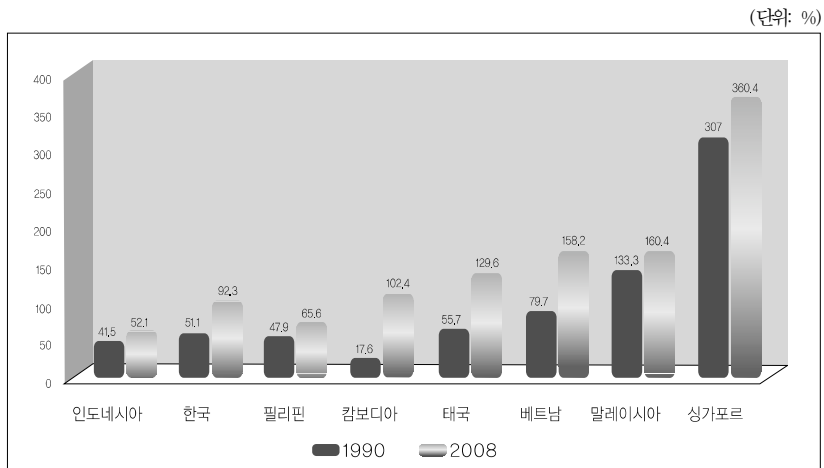
#### 가. 무역의존도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한 대부분의 ASEAN 국가는 무역의존도(GDP 대

5)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Cross-Country Fiscal Monitor.

비 수출입)가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는 수출보다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주변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낮다. 무역의존도는 197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지만, ASEAN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과거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2008년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미얀마와 라오스를 제외하면 ASEAN 국가 중 가장 낮다(그림 2-7 참고).<sup>6)</sup>

■ 그림 2-7. 1990년과 2008년 주요 ASEAN 국가의 무역의존도 ■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09), Key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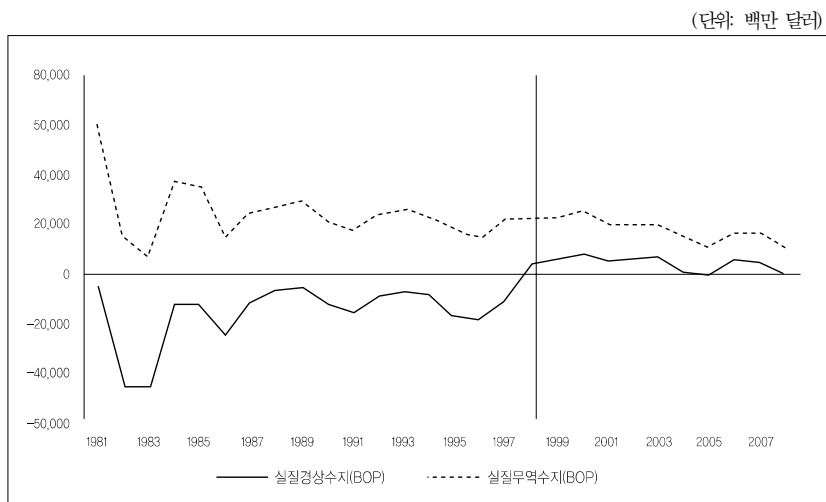
## 나. 교역구조

외환위기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였지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수입이 수출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여(-34.4% vs.

6) 미얀마의 2006년 무역의존도는 0.3%이며, 라오스의 2007년 무역의존도는 47.2%이다.

4.7%)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그림 2-8 참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를 상쇄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2-8. 인도네시아 실질무역수지 및 실질경상수지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EU, 미국이고, 주요 수입국은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다(표 2-1 참고). 국별 수출에서 일본, EU, 미국은 1995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이들 국가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7.0%에서 2008년 20.3%로, EU는 15.2%에서 11.2%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수치는 같은 기간 6.4%에서 6.7%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순위는 5위에서 6위로 하락하였다.

국별 수입의 경우 1990년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EU, 미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중국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가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1995년 전체 수입의 5.8%를 차지하던 싱가포르의 비중은 2008년 16.9%,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3.7%에서 11.8%로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05년 중·ASEAN FTA 체결 이후 3년 만에 수입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2-1. 인도네시아 국별 교역액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5년		구 분	2008년	
	수출액	수출 비중		수출액	수출 비중
총교역액	120,955.6	100.0	총교역액	57,596.5	100.0
일 본	32,681.6	27.0	일 본	11,662.0	20.3
E U	18,414.5	15.2	E U	6,444.9	11.2
미 국	16,813.1	13.9	미 국	5,498.1	9.5
싱가포르	10,017.9	8.3	싱가포르	5,406.5	9.4
한 국	7,757.3	6.4	중 국	4,891.3	8.5
중 국	4,632.2	3.8	한 국	3,832.2	6.7
홍 콩	4,407.1	3.6	인 도	3,011.1	5.2
네덜란드	3,862.7	3.2	말레이시아	2,703.9	4.7
독 일	3,674.4	3.0	호 주	1,728.0	3.0
영 국	3,001.7	2.5	네덜란드	1,650.4	2.9
말레이시아	2,623.9	2.2	태 국	1,539.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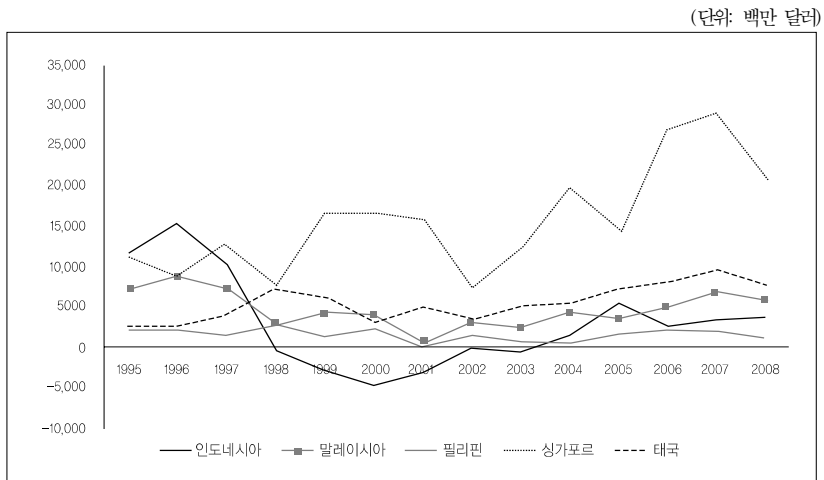
구 분	1995년		구 분	2008년	
	수입액	수입 비중		수입액	수입 비중
총교역액	108,057.7	100.0	총교역액	54,339.6	100.0
일 본	24,512.8	22.7	싱가포르	9,159.4	16.9
E U	22,033.1	20.4	중 국	6,409.9	11.8
미 국	12,648.7	11.7	일 본	6,359.5	11.7
독 일	7,497.8	6.9	E U	4,430.1	8.2
말레이시아	6,902.0	6.4	말레이시아	3,750.8	6.9
한 국	6,519.4	6.0	미 국	3,319.9	6.1
싱가포르	6,296.5	5.8	한 국	2,911.2	5.4
호 주	5,360.5	5.0	태 국	2,663.4	4.9
중 국	3,976.6	3.7	사우디아라비아	2,019.7	3.7
프랑스	2,828.6	2.6	호 주	1,683.6	3.1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 다. 외국인직접투자

외환위기 직후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의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ASEAN 주요 5개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외국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림 2-9]에서 나타났듯이 외환위기 당시 투자승인을 획득한 사업도 철수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늘어 외국인직접투자가 ASEAN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음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4년 유도 요노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대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2002년 442건이었던 실현된 외국인직접투자 건수가 2008년에는 1,138건을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1억 1,000달러에 불과했던 실질 투자액이 34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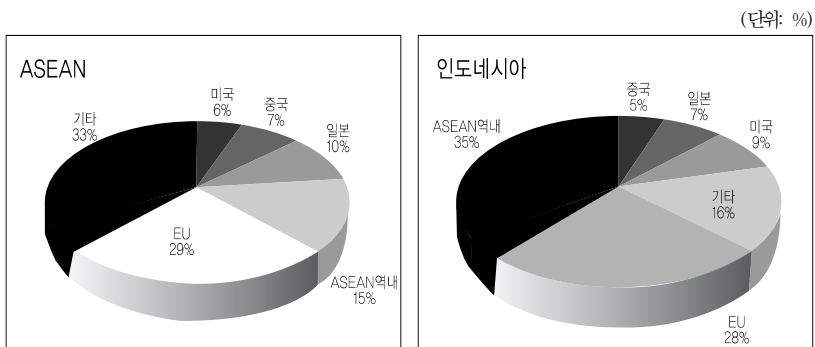
■ 그림 2-9.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995~2008년, 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2008).

2000~08년 ASEAN 전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총 3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를 국별 또는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중 EU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29%인 11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ASEAN 역내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15%인 58억 달러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총투자액 220억 달러 가운데 ASEAN 역내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35%인 70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EU와 미국 순이었다(그림 2-10 참고).

■ 그림 2-10. 국별 ASEAN 및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2000~08년) ■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2008).

## 4.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 가. 교역관계

2008년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싱가포르 교역액은 2008년 기준 247억 달러로 대ASEAN 교역액의 27.3%를 차지하였고, 대인도네시아 교역액은 192억 달러로 대ASEAN 교역액의 21.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

아 간 교역규모는 외환위기 당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실질교역액은 199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2-2 참고).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원유 및 석탄과 같은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반면 수출액은 수입액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대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2-2 한국의 대ASEAN 주요국 실질 수출입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 국		필리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6	7,170	2,814	4,825	3,349	3,561	4,469	2,967	1,357	2,122	647
1997	6,174	2,574	4,639	3,496	3,771	4,374	2,389	1,367	2,770	758
1998	4,090	1,723	3,624	2,224	1,795	3,076	1,459	814	2,849	812
1999	4,956	2,328	3,673	3,178	2,557	4,015	1,747	1,075	3,151	1,167
2000	5,648	3,723	3,515	4,878	3,504	5,287	2,015	1,631	3,360	1,815
2001	3,927	2,898	2,529	3,971	3,157	4,306	1,779	1,529	2,440	1,751
2002	3,938	3,200	3,002	3,770	2,934	4,406	2,179	1,588	2,752	1,742
2003	4,177	3,685	3,470	3,828	3,043	4,695	2,274	1,710	2,680	1,769
2004	4,942	3,899	3,916	4,964	3,215	5,566	2,840	2,055	2,954	1,853
2005	6,429	4,616	4,000	5,218	4,380	7,105	2,935	2,334	2,795	2,010
2006	8,252	5,119	4,545	6,298	4,238	7,694	3,692	2,894	3,418	1,901
2007	10,178	5,843	4,859	7,191	4,915	7,763	3,823	3,211	3,765	2,077
2008	13,510	6,933	4,805	8,217	6,578	9,387	4,792	3,550	4,159	2,570

자료: 무역협회, Kita.net.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1990년대까지는 직물이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석유제품이다. 2008년 대인도네시아 수출품 중에서는 석유제품이 31.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관 순이었다.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천연가스(22.9%), 석탄(18.5%) 및 원유(13.7%)와 같은 자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3 참고).

■ 표 2-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7년 수출품목				1997년 수입품목			
	품목명	금 액	증가율	비 중	품목명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계	3,541	10.7	100.0	총 계	4,107	2.3	100.0
1	기타직물	214	0.1	6.0	천연가스	1,324	4	32.2
2	가 죽	164	-16.9	4.6	원 유	846	15.6	20.6
3	인조장 섬유직물	142	2.6	4.0	석유제품	316	47.4	7.7
4	석유제품	131	721.2	3.7	동 광	153	1.1	3.7
5	합성수지	154	3.8	4.3	목재류	435	-21.6	10.6
구분	2008년 수출품목				2008년 수입품목			
	품목명	금 액	증가율	비 중	품목명	금 액	증가율	비 중
	총 계	7,934	37.5	100.0	총 계	11,320	24.2	
1	석유제품 <sup>1)</sup>	2,465	66.5	31.1	천연가스	2,595	12.4	22.9
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46	451.6	6.9	석 탄	2,098	53.4	18.5
3	철강관	512	81.9	6.5	원 유	1,555	52	13.7
4	편직물	454	34.2	5.7	석유제품	756	25.6	6.7
5	합성수지	441	31.2	5.6	동 광	482	-25.1	4.3

주: 1) 상품 분류는 MTI 세 단위 기준이다.  
자료: 무역협회, Kita.net

## 나.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68년 국내 경제발전에 필요한 목재, 원유, 석탄 등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1998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큰 폭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08년 연평균 증가율은 73.1%로, 2008년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전년대비 107.8% 증가한 4억 3,000달러이다(표 2-4 참고).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주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총투자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70.0% 이상을 차지하였다.

■ 표 2-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건, 백만 달러)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신고 건수	106	96	50	96	120	136	173
신고 금액	256.2	422.8	96.6	183.3	111.0	191.6	84.9
투자 금액	188.3	197.0	93.6	131.0	95.0	167.5	67.2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누 계
신고 건수	144	189	288	482	562	414	2856
신고 금액	202.6	56.8	118.1	210.5	473.7	579.7	2,987.9
투자 금액	76.6	49.8	86.0	127.8	208.7	433.7	1,922.2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5. 소결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최근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6%대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재정수지와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도 모두 ASEAN 국가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하여 견고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무역의존도 역시 낮아 경제위기의 타격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는 3~4장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 및 경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제3장

---

##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

본 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정치변화를 개관하여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 정권의 등장 및 퇴진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198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대를 기록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으나 수하르토 정권의 폐단은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 가려 좀처럼 표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인도네시아 경기침체가 신질서(New Order) 체제의 위기로 이어진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1998년 5월 피플파워(People Power)의 주도로 수하르토의 7선 임기를 저지하는 데

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여 정치적 불만이 표출되면서 수하르토의 독재는 마침내 종결되었다. 수하르토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폐쇄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수카르노(Achmed Sukarno) 정권과 달리 개방적 시장구조를 형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군부의 이중기능, 인맥 중심주의, 화교 차별정책 등은 정권의 치명적인 한계로 알려져 있다.

수하르토의 퇴진 이후 부통령이었던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가 전권을 위임받고 과도정부를 구성하였다. 정치·사회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혁(reformasi)을 주장하였던 하비비 정부는 1998년 11월에 군의 정치참여 제한, 정당의 수와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공무원의 정당 활동 참여 금지 등을 골자로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내 인권문제 개선 및 족벌·정실주의 타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과 개혁적 이미지를 강조했던 하비비는 1999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승리 후보였다. 그러나 정권 말기로 갈수록 개혁 성향 감소와 경제난 극복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재집권에 실패하여 1년 5개월의 짧은 국정운영을 마무리하였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1999년 10월 20일에는 첫 자유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메가와티(Megawati Sukarnoputri)를 지목했던 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와히드(Abdurrahman Wahid)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중부와 동부 자바를 지역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톨 울라마(Nadhlatul Ulama)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와히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 개혁을 실시하였다. 과거 부패의 온상지이자 언론 통제를 위해 이용되었던 복지부(Ministry of Welfare)와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를 해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 만에 잦은 해외 순방과 국정운영의 미숙함으로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2000년에는 ‘블록 게이트(Bulog Gate)’와 ‘브루나이

게이트(Brunei Gate)<sup>7)</sup>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의회 해산 명령에 반발한 군부가 와히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었다. 마침내 특별위원회는 3개월간의 부패 조사 끝에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메가와티가 2001년 7월 말부터 2004년 10월까지 국정을 담당하였다.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의 딸로 인도네시아의 민족계열과 비이슬람 세력 그리고 아방안(Abangan) 무슬림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정부출범 이후에는 기대만큼의 국정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정치·경제적 개혁의 미비, 군부집단과의 정당연합, 정치적 리더십 부족, 물가상승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 등이 메가와티 정부의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결국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한 메가와티는 2004년 7월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청렴한 개혁과 정치인임을 강조한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에 패배하였다.

유도요노는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60.6%의 대선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 4월 총선에서 절대 다수석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의 의회 기반은 매우 취약하였다. 그는 부패척결을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개혁의제로 내세우며 2005년 4월 아체 주지사의 공금 착복, 5월 만디리 은행 총재의 부정 대출, 7월 네가라 은행의 전임 임원 비리 및 선거관리위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 착수하여 부패 국가의 오명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기존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하는 신투자법(2007년 제2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주력하였다.

취임기간(2004-08년)내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5.5%에 달

7) 블록 게이트는 대통령궁 전속 안마사의 조달청 공적자금 횡령에 와히드 대통령이 연루되었다고 의심받은 사건 이었고, 브루나이 게이트는 브루나이 국왕이 아체 지역의 민족사업을 위해 기부한 200만 달러를 대통령이 사 용하였다는 정치적 스캔들을 일컫는다.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유도요노 정부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주요 요인이었다. 이로써 안정적인 국민 지지를 확보한 유도요노는 2009년 재선에 성공하여, 같은 해 10월 ‘번영,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Kesejahteraan, Demokrasi dan Keadilan)’를 목표로 하는 제2기 정부를 출범하였다.

## 2.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체제 재정비

수하르토 하야 이후 일부 시민단체, 학생 및 지식인들은 1945년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불명확하고 미완성적인 기존 헌법의 성격 때문에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장기집권을 저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기념하며 뻘짜실라<sup>8)</sup>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의된 1945년 헌법이 단번에 폐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초기 헌법의 상징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폐지 대신 개정을 선택,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네 차례의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변해철 2004). 결과적으로 전체 조항의 89%가 수정되었으며, 기존의 16개 장, 37개 조항이 개정 이후에는 20개 장과 73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Indrayana 2008).

표 3-1. 1945년 헌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불변	삭제	개정	추가	전체	불변(%)
장	16	1	1	14	5	20	1/20=5%
조항	37	8	1	28	37	73	8/73=11%
문단	65	29	2	34	131	194	29/194=15%

주: Indrayana(2008), p. 331.

8) 뻘짜실라(Pancasila)는 인도네시아어로 다섯 가지 원리라는 뜻으로 ‘최고신에 대한 신앙의 원칙’, ‘인도주의의 원칙’, ‘민족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제1차 개정: 1999년 10월

1999년 10월 헌법 개정이 확실히 된 이후, 국민협의회(MPR)<sup>9)</sup>는 1945년 헌법의 상징성을 보존하는 선에서 기존 헌법에 입각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1차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입법부로 분산시킨 것이다. 즉 국회(DPR)<sup>10)</sup>의 기능 강화로 요약되며 국회의 권한에 대해 더욱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변화로는 입법 시 대통령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대사 및 영사를 임명하거나 외국 사절단을 초청할 때, 범죄자의 사면 및 감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정한 것은 대통령과 입법부 간 권력 균형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장기집권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연임 기회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2) 제2차 개정 : 2000년 8월

2000년 정기회기에서 진행된 2차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국회, 시민권, 국방 및 안보, 국가 상징 등 5개 장이 수정되었고 인권, 국가 영토의 2개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우선 지방분권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자치권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주지사, 시장 등을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1차 헌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역할 및 권한을 증대시켰다. 모든 국회의원은 총선거로 선출하고 경찰의 비선출직 국회의원 진출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정부 감시, 예산

9)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의 준말로 '국민협의회'를 뜻함.

10) Dewan Perwakilan Rakyat의 준말로 '국민대표의회'를 뜻함.

승인 등 국회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대정부질의권, 국정조사권, 의사표출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을 헌법상에 명기하였다(Ellis 2002).

한편, 인권에 관한 장이 추가된 것은 2차 헌법 개정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변화이다. 1945년 헌법의 경우 제10장 시민과 거주자(Citizens and Residents)부분에서 인간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논의할 뿐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제2차 개정에서 인권의 장 도입은 국가에서 국민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관심의 대상이 변하는 민주주의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3) 제3차 개정: 2001년 11월

11월 정기회기가 개최되기 전에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되고 메가와티가 새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등 여러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더 이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님이 증명되면서, 제3차 헌법 개정은 소수 지도층의 일방적 통제가 아닌 헌법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데 합의하고 이들의 탄핵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회해산 및 연기를 금지하였으며 중요한 국제협약 체결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변해철 2004). 또한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대표의회(DPD: Dewan Perwakilan Daerah)를 설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단계적 조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등 권력을 분산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4) 제4차 개정: 2002년 8월

2004년 총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전개된 제도개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제4차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MPR의 간접선거로 진행되는

기존의 대통령·부대통령 선출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였고 군부와 경찰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비선출 의석을 폐지하였다. 그 밖에도 헌법개정 절차를 확립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였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상당 부분 완성하였다(변해철 2004).

### 3. 지방분권화와 부패문제

수하르토 시기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주의(NKRI,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라는 국가목표하에 소수 지도층이 국가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였다. 지도층은 중앙에 대한 비판 세력을 국가의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반역자로 몰아가며 지배구조를 고착화시켜 나갔다. 이처럼 수하르토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1992년 정부령 제45호(Peraturan Pemerintah No. 45)를 발표하며 각 군(district)에 자치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 발전 계획을 각 지역 단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에 머물렀다.

군부의 이중기능(Dwi Fungsi)<sup>11)</sup>에 따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병폐가 드러나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갔다. 그리고 지도층 역시 다종교, 다민족으로 구성된 2억 인구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지방분권화는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되었다. 하비비 정부는 1999년에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 제22호와 중앙·지방 간 재정적 균형을 위한 법률 제25호를 제정하여<sup>12)</sup>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려 하였다. 법안이

11) 군부의 이중기능은 군부가 국가안보 이외에도 사회, 경제, 정치부문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이로 인해 신질서 체제하에서는 군부의 정치권 개입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시행된 2001년 첫 해의 평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과거에는 전체 정부지출의 13%만이 지방정부로부터 발생하였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35%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표적 증거이다(Bahl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법은 논쟁적 요소가 많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지방정부가 누릴 수 있는 정치·경제적 특혜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주(province)에서 분리되어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한 지역 간 통폐합이 성행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7개의 주, 196개의 시/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또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수장은 중앙 정부에 대한 로비를 일삼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지역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 표 3-2. 지방분권화 관련 법률 ■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 제22호	중앙·지방정부가 재정균형에 관한 법률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과 지방(주, 군)정부 간의 위계적 구조를 폐지함.</li> <li>-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이들은 지방의회와 지방 유권자를 대표함.</li> <li>- 중앙정부의 권한은 국가전체 차원의 업무(외교, 국방, 경제계획, 국가 행정 등)로 명시함.</li> <li>-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단위는 통합시키며, 주(province)는 군(district)보다 상위 단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에 대한 기존의 중앙정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보조금과 특별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균등화자금(equalization grants) 제도로 대체함.</li> <li>- 지방정부는 지역 내 원유 개발 수익의 15%, 가스 개발 수익의 30%, 중앙 정부의 광업·농어업 자원개발 수익의 80%를 받게 됨.</li> <li>-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재정 업무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님.</li> </ul>

자료: Booth(1999).

인도네시아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이유를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패 문제가 확대·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2002년 서부 수마트라를 시

12) 두 법안은 기존의 Law No.5, 1974와 Law No.5, 1979를 대체함.

작으로 남동부 슬라웨시, 서부 깔리만탄, 랍푹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의회가 연루된 부패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지방의회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은 무려 265건에 이른다(Rinaldi, Purnomo, Damayanti 2007).

수하르토 시기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하나같이 부패청산을 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단위의 내부 관리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2004년, 2009년 연임에 성공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우 특히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9*에 따르면 여전히 입법부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공 부문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부패정책이 요구된다.

#### 4. 분리독립운동의 진행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분리독립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특히 동티모르(East-Timor), 아체(Aceh), 서파푸아(Western Papua) 등 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분리독립운동이 진행되어 현재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아체와 서파푸아는 특별자치권을 획득한 상태이다.

식민지 시대와 1차, 2차 세계대전 시기 강대국들은 과거 독립국가였던 이들 세 지역에 대해 일방적인 영토합병을 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 군부(TNI)는 국가통합을 명분으로 이들 지역에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하였고 대량 학살 및 인권유린 등 각종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세 지역 내 민족주의 저항의식은 빠르게 고조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인

도네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수하르토의 철권통치가 끝나면서 차기 하비비 정부는 국내외 압력에 굴복하고 1999년 1월 동티모르의 자치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UN의 주도로 동티모르의 자치 또는 독립을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압도적 표 차이로 독립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친인니 자치파 민병대가 수많은 동티모르 주민들을 살상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다국적군(INTERFET)이 투입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지배는 사실상 종결되고 2002년 공식적인 독립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아체와 서파푸아 지역에 특별자치권을 제공함으로써 각각 자유아체운동(GAM), 자유파푸아운동(OPM)이 주도하는 분리 독립 움직임을 완화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에는 두 지역에 대한 특별 자치법<sup>13)</sup>이 발표되어 석유 및 천연가스 수익의 70%를 해당 지역에서 보유하고 지역관할권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파푸아는 기본적으로 비폭력적인 방식의 온건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적은 편이었던 반면, 아체에서는 중앙정부와의 무력충돌과 유혈전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2005년 헬싱키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자유아체운동 평화협정 체결되면서 가시적인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이지만 애초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기 때문에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 5. 테러와 국가안보 실태

인도네시아의 테러 문제는 2000년 9월에 발생한 자카르타 주식시장 폭탄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10명의 사망자와 16명

---

13) 아체 특별자치법(Law No. 18/2001)은 2001년 8월에, 파푸아 특별자치법(Law No. 21/2001)은 같은 해 11월에 발표되었음.

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급진 이슬람 단체에 의한 폭탄 테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같은 해 12월 성탄절 전날에 교회를 방문한 기독교인들과 성직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가장한 폭발물이 배달되어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2002년 유명 휴양지인 발리(Bali)의 나이트클럽 두 곳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많은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발리 폭탄테러사건은 인도네시아의 테러리즘이 국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ASEAN 역내, 나아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후 2003년 JW 메리어트 호텔 차량 폭발사건, 2004년 호주 대사관 폭탄테러, 2005년에는 3년 전의 테러를 재연하는 발리 테러 등 서방 국가들을 자극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였다.

역내 테러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반테러법 개정을 비롯하여 정부의 반테러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면서 테러 사건은 2~3년 간 잠시 주춤하였다. 그 기간 동안 국내 테러 사건을 주도해왔던 제마이슬라미야(Jemaah Islamia)<sup>14)</sup>의 최고 폭탄 제조자인 Dr. Azahari bin Hussin과 주요 테러리스트들이(2006년 11월) 검거되었고 수마트라 Pekenbaru에 위치한 핵심 용의자들이(2008년 7월) 체포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견재함을 과시하듯 2009년 7월 자카르타의 리츠칼튼 호텔과 JW 메리어트 호텔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여 국내외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테러 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4) 1940년대 제마이슬라미야(JI)는 경전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며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시작됨.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으며 극단적인 반서방 무장단체로 변모,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폭탄 테러가 JI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됨. 인도네시아를 본거지로 활동해왔으나 Pan Islamic State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부 필리핀 등으로 근거지를 확대함.

## ■ 글상자 1. 인도네시아 테러 일지 ■

- 2000년 8월 1일: 인도네시아 주재 필리핀 대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폭탄 테러 발생, 2명 사망, 21명 부상
- 2000년 9월 13일: 자카르타 주식시장 건물에서 차량 폭발 사건 발생, 10명 사망, 16명 부상
- 2000년 12월 24일: 인도네시아 전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성직자 및 기독교인들을 타깃으로 한 연쇄 폭탄 테러 발생, 18명 사망, 100여명 부상
- 2002년 10월 12일: 발리의 나이트클럽 두 곳에서 대규모 차량 폭발 일어나 202명 사망, 300명 부상(피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특히 호주인의 피해가 극심)
- 2003년 8월 5일: 자카르타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차량폭탄 테러 발생, 12명 사망, 150명 부상(사망자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인, 메리어트 호텔은 서구를 상징하는 건물로 미국 대사관의 주요 행사 개최지임)
- 2004년 9월 9일: 자카르타의 호주 대사관 밖에서 자살폭탄 테러 발생, 약 10명 사망, 150명 부상(10월 9일 호주 대통령선거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 발생)
- 2005년 5월 28일: 중부 슬라웨시주(州) 텐테나 마을 시장에서 동시 폭발로 22명 사망
- 2005년 10월 1일: 발리 해변가와 상가에서 삼중 폭탄테러 발생, 20명 사망
- 2009년 7월 17일: 자카르타의 리츠칼튼, JW 메리어트 등 해외 유명 호텔 체인에서 폭발 사고로 9명 이상 사망, 41명 부상

## 6. 소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30여 년 간의 수하르토 장기 집권이 종결되면서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 유도요노 1기정권을 거쳐 현재의 유도요노 2기정부가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한 정치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회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기념하며 제정되었던 1945년 헌법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막강한 통제권을 지녔던 기존 체제에서 탈피하여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헌법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수십 년간 중앙에 집중되었던 각종 자원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분

산되며 지방분권화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분리독립운동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2001년 아체와 서파푸아는 특별자치권을, 2002년 동티모르는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처럼 독재정권의 퇴진 이후 인도네시아는 상당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전면에 등장한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 짐에 따라 현 정부는 강력한 반테러 정책을 수행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대테러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치변화에 대한 이해는 다음 장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제4장

##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변화

본 장에서는 2~3장의 내용을 토대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위기 직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을 시작으로 금융, 노동, 부패척결 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종합한다.

### 1. 외환위기 직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 가. 외환위기 시작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위기의 직접적인 시발점은 1997년 7월 2일 태국 바트의 평가절하이다 (Radelet, Sachs, 2000). 바트 방어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압력을 견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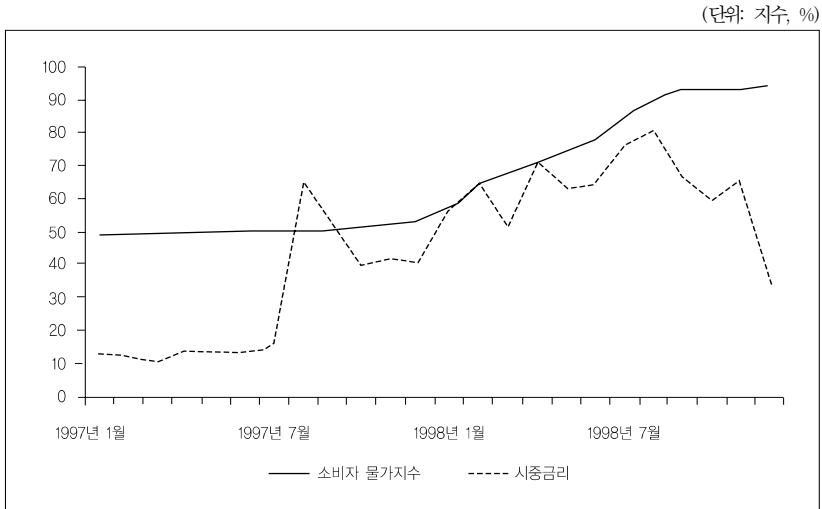
못하자 태국정부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고 바트 가치는 급락하였다. 외채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던 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과도한 외채, 특히 단기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미래 자금회수가 불확실해진 상황에 빠지자 동시에 자금회수에 나섰다. 또한 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겪기 시작하자 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은 태국 경제와 비슷한 구조를 지닌 여러 아시아 국가도 비슷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달러에 고정된 루피아도 평가절하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7년 7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의 환율정책 개입구간을 8%에서 12%로 확대하면서 고정환율제를 방어하려고 하였으나 열흘 만에 루피아 가치가 7% 하락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국 정부의 환율방어 실패를 반영하여 8월 14일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 나. 초기 외환위기 대응

태국의 변동환율제 채택부터 시작된 루피아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서 8월 19일 BI는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긴축통화정책이 실시되면서 시중이자율은 7월 15.9%에서 8월 65.0%로 급상승하였지만 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그림 4-1 참고). 긴축통화정책 발표와 함께 루피아 가치가 잠시 상승하였지만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9월 1일과 16일 각각 1차 및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긴축통화로 감소한 수요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10월 8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외채상환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그림 4-1. 인도네시아 소비자물가지수와 시중금리 추이(1997~98년) ■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자료: 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 IMF.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발표와 IMF 구제금융신청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통화 가치와 주가지수가 동시에 하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었다. 결국 10월 28일 일명 검은 화요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하였다. 3일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1차 IMF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루피아 가치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다음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16개 은행을 파산처리하였고 이틀 후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부문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1월 5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산처리하려고 시도했던 은행 중 하나인 안드로메다 은행(Bank Andromeda)이 파산거부항소를 신청하면서 은행부문 개혁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1월 20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성장모형으로 삼고 있던 우리나라까지 아시아 외환위기의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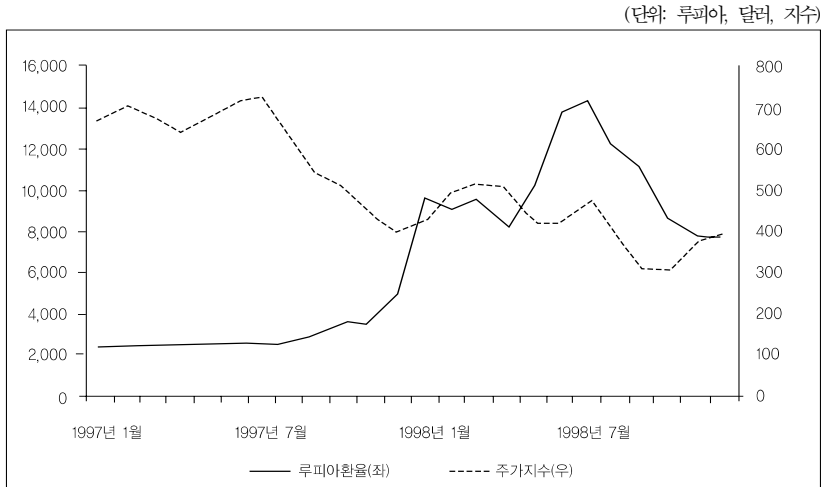
을 받았고 수하르토의 건강 악화설까지 나돌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전망은 더욱 불확실하게 되었다.

#### 다. 초기 외환위기 대응 실패

1998년 1월 초 루피아 가치는 폭락하였고 태국의 변동환율제 채택과 함께 시작된 주가지수 하락은 멈추지 않았으며 물가는 치솟기 시작하였다(그림 4-2 참고). 여기에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외채추정치가 엇갈리고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주요 신용등급평가기관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다. 더욱이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달러 당 4,000루피아, 4% 경제성장률, 9% 인플레이션 등 지나치게 낙관적인 지표에 기초하여 비현실적인 예산안까지 편성하여 향후 인도네시아의 재정운영까지 불확실하게 되었다. 비현실적인 예산안 책정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는 가운데 1월 8일 워싱턴 포스트는 IMF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정문 이행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약한 경제개혁 의지를 드러내어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1월 10일 심리적 저지선인 1달러 당 10,000루피아가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루피아 사랑 캠페인(GETAR)을 시행하여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화를 루피아로 교환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루피아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화를 매각하고 루피어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이 캠페인은 결국 실패하였다. 1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운송 회사인 스테디 세이프(Steady Safe)의 채권을 인수한 홍콩주재 대형투자회사인 페레그린 투자(Peregrine Investments)까지 파산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완전히 침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 그림 4-2. 인도네시아 루피아환율과 주가지수 추이(1997~98년) ■



자료: 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 IMF.

## 라. 외환위기 심화

인도네시아 경제가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1월 1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차 IMF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1차 협정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IMF는 더욱 구체적인 개혁안을 요구하였다. 곧 이어 건강 악화로 장래가 불확실하고 경제위기 중심에 선 수하르토가 대통령 연임 의도를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국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까지 혼란스럽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경제혼란에 정치혼란까지 가중되면서 1월 22일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1달러 당 17,000루피아, 즉 변동환율제 채택 후 루피아 가치는 80% 이상까지 하락하였다. 1998년 2월 인도네시아의 총외채는 1,317억 달러였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절반 정도 차지하였다(표 4-1 참고). 루피아 가치가 폭락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1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채무이행중지를 신청하였다. 같은 날 인도네시

아 정부는 은행 구제안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은행구조조정기구(IBRA: Indonesia Bank Restructuring Agency)를 설립하여 은행부문 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다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지표를 기초로 예산안을 수정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이미 예견되었다.

■ 표 4-1. 1998년 2월 말 인도네시아 외채 ■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금 액
총 외채	131.7
공공부문 외채	65.4
정 부	53.5
공기업	11.9
민간부문 외채	66.3
민간은행	8.6
비은행 기업	57.7
은행신용장	53.9
외국 또는 외국합작투자	26.2
민간국내기업	27.8
기업어음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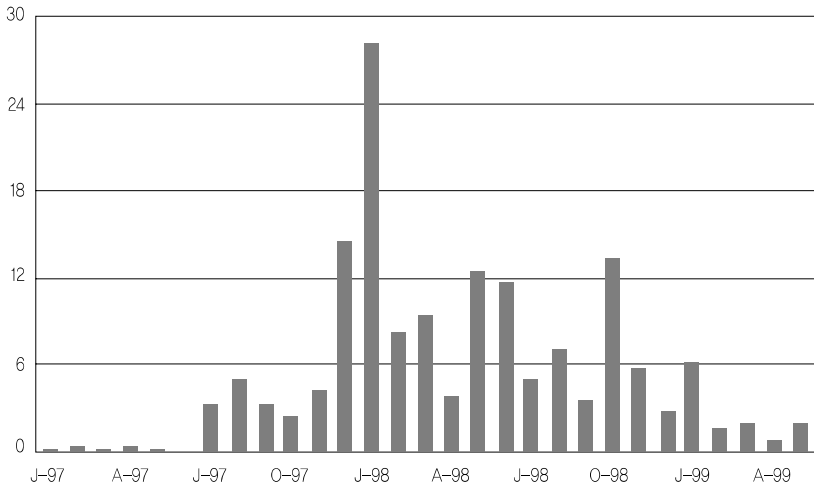
자료: Johnson(1998), 표 6, p. 53.

## 마. 통화가치와 주가 변동을 통해 본 외환위기의 심각성

이와 같이 1997년 7월~1998년 2월 아시아 외환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은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글상자 2에 정리되어 있다. 1998년 2월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고,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가치와 주가는 이 상황을 잘 반영한다. 변동계수로 루피아 가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1997년 7월 태국의 변동환율제 채택과 함께 루피

아 가치는 심하게 변동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1월 루피아 가치 변동이 최고에 달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투명한 전망을 반영하였다. 이후 루피아 가치 변동계수는 하락하였지만 1999년 1월까지 루피아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동하였다(그림 4-3 참고).

■ 그림 4-3. 루피아 가치 변동 추이(1997~99년) ■



주: 변동은 각 월의 변동계수, 즉 각 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함.  
 자료: Pardebe(1999), 그림 5, p. 18.

아시아 외환위기 중 루피아 가치가 심하게 변동했을 뿐만 아니라 낙폭도 컸다. 태국의 변동환율제 채택 시기부터 루피아 가치하락이 심했던 1997년 7월 1일~1998년 9월 15일 중 달러 대비 통화가치 하락폭은 인도네시아 주 변국보다 훨씬 낮은 -78%였고,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가 외환위기의 충격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반증한다(표 4-2 참고).

같은 기간 루피아 가치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주가 하락폭도 컸다. 인도네시아의 주가 하락폭은 60%로 태국, 필리핀, 한국과 비슷하지만 뉴질랜드, 일본, 대만, 호주의 수치를 크게 상회한다(표 4-2 참고).

루피아 가치 폭락이 주가 폭락과 함께 발생했을 때 달러표시 주식가치 손실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달러표시 주식가치 손실은 91%로 주변국보다 훨씬 큰 손실을 경험하였고, 이 수치는 아시아 외환 위기의 시발점인 태국의 77%보다도 높다(표 4-2 참고).

■ 표 4-2. 1997년 7월 1일~1998년 9월 15일 주식가치 손실 측정 ■

(단위: %)

시 장	주가 변동	달러 대비 통화 변동	자본 빈곤 달러표시 주식가치 손실
인도네시아	-60	-78	-91
태 국	-60	-42	-77
말레이시아	-64	-34	-76
필리핀	-59	-40	-75
한 국	-59	-36	-74
싱가포르	-54	-17	-62
홍 콩	-49	0	-49
뉴질랜드	-29	-25	-47
일 본	-29	-14	-39
대 만	-24	-20	-39
호 주	-6	-21	-26
평 균	-45	-30	-60

자료: Evans(1998), 표 1, p. 20.

인도네시아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구조개혁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이 위기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금융, 노동, 투자 등과 같은 경제구조변화, 헌법개정, 대통령직선제 도입, 지방분권과 같은 정치구조변화, 부정부패척결과 같은 사회구조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치구조변화에 관해서는 3장에 기술되어 있으며, 본 장의 다음 절부터는 이들 변화 부문 중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 시 중요한

금융, 노동, 부패 부문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기술하고 5장에서 신투  
 자법을 개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방안을 모색해 보  
 겠다.

## ■ 글상자 2.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인도네시아 내 주요 사건 ■

### 1997년

- 7월 2일 태국 변동환율제 채택
- 7월 11일 루피아 시장에서 BI의 정책 개입 구간을 8%에서 12%로 확대
- 7월 21일 초기 루피아 평가절하(7%)
- 8월 14일 인도네시아 변동환율제 채택
- 8월 19일 긴축통화정책
- 9월 1일 1차 정부 패키지 발표
- 9월 16일 2차 정부 패키지 발표
- 10월 8일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
- 10월 28일 “검은 화요일”: 주가 폭락
- 10월 31일 1차 IMF 협의서 서명; 430억 달러 스탠바이 대출(standby facility)
- 11월 1일 16개 은행 파산
- 11월 3일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
- 11월 5일 Bank Andromeda 파산 거부 항소(추후 다른 이름으로 활동 개시)
- 11월 20일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확산
- 12월 6일 수하르토 건강 악화에 관한 소문 심화

### 1998년

- 1월 엇갈린 단기외채 추정치 발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하락
- 1월 6일 1달러 당 4,000루피아, 4% 경제성장률, 9% 인플레이션에 기초한 예산안 발표
- 1월 8일 Washington Post는 IMF가 인도네시아의 개혁 진행에 불만이 있다고 보도
- 1월 9일 Clinton, Hashimoto, 그 외 주요인사가 수하르토와 통화
- 1월 10일 1달러 당 10,000루피아의 심리적 지지선 붕괴
- 1월 12일 루피아 사랑 캠페인(GETAR) 발표
- 1월 13일 Peregrine Investments 파산
- 1월 15일 2차 IMF 협의서 서명; 더욱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
- 1월 20일 수하르토는 대통령 연임 의도를 발표; 하비비는 부통령으로 지명
- 1월 22일 1달러 당 17,000루피아 기록, 은행 회복안 발표; IBRA 설립; 정부의 채무이행 중지 요청
- 1월 23일 1달러 당 5,000루피아, 0% 경제성장률, 20% 인플레이션에 기초한 수정예산안 발표
- 1월 27일 신은행부문 개혁안 발표
- 2월 통화위원회제도를 심각히 고려

자료: Soesastro(1998), p. 8.

## 2. 은행부문 구조조정 진행

### 가. 초기 정책

1988년 10월 인도네시아에 은행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은행이 1988년 111개에서 1994~96년에는 240개로 급증하였다. 은행 수 증가와 함께 은행규제와 감독체제도 개선되었지만 은행 수 증가에 비해서 그 수행능력은 미약하였다. 미진한 은행규제와 감독체제 개선의 대표적인 예는 정부은행이다. 1980년대 후반 7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정부은행은 투자가치보다 정치력에 따라 대출활동을 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부터 이미 잠재적 부실대출이 상당히 존재하였다(Enoch, Frecaut, Kovanen 2003, pp. 76-77).

수하르토 집권 후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전까지의 고도성장기에 드러나지 않던 은행부문의 문제점이 아시아 외환위기 결과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97년 7월 태국정부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아시아 통화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인도네시아 국내의 투자자들이 루피아를 동시에 매각하기 시작하자 루피아의 가치는 급락하였다. 규제 및 감독 소홀, 효과적인 환해지 부족, 다량의 외국환 표시 대출, 특히 해외단기대출을 이용한 국내 기업으로의 장기대출, 정치력에 기초한 대출 행태 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은행들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현상이 은행부문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IMF와 첫 협상을 마친 다음 날인 1997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6개 은행의 파산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16개 은행에 입금된 예금의 2,000만 루피아(당시 환율로 약 5,000달러)까지 보호한다고 발표하면서 지불인출쇄도(bank run)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16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5%에 불과하였지만(Enoch, Frecaut, Kovanen 2003,

p. 77) 이 은행 중 3개<sup>15)</sup>는 수하르토 가족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구조조정이 정치력보다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6개 은행 중 몇몇 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실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추후 어떤 은행이 추가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을지 불안해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금융사정 악화, 인도네시아 국내경기 악화, 루피아 가치 급락, 이자율 급등, 수하르토의 건강 악화 소문 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 은행부문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결국 1997년 11월에만 전국단위 민간은행 예금의 11.9%가 인출되었고, 이 중 절반가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된 정부은행 또는 외국은행에 재입금되면서 은행부문 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Johnson 1998, p. 46).

2,000만 루피아 상한의 예금자보호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지불인출쇄도는 계속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2,000만 루피아 이하의 예금자는 전체 예금자의 90%를 차지하여 예금자보호정책이 거의 대부분의 예금자를 보호한 것처럼 보였지만, 2,000만 루피아 이하의 예금액은 총예금액의 25%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고액의 예금이 은행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이다(Enoch, Frecaut, Kovanen 2003, p. 77).

## 나. IBRA 설립

민간은행을 중심으로 지불인출쇄도가 발생하자 1998년 1월 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은행의 예금자와 채권자의 자산을 액수에 제한 없이 보증한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다음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할 IBRA의 설립이 계획되었다. 1) 은행체계 재구성과 지원(정부가 상당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은

---

15) Bank Andromeda, Bank Industri, Bank Jakarta.

행의 민간이전 포함), 2) 기존 은행 소유주의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 3) 은행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BRA로 이전된 부실대출 재구성과 매각(Waslin 2003, p. 18).

IBRA가 총은행자산의 40%에 해당하는 54개 은행을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3월 초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IBRA 총책임자 수브잔토(Bambang Subianto)가 해임되고 BI 이사(managing director)인 프라와란타(Iwan Prawaranata)가 이 임무를 맡으면서 IBRA는 BI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펴기 힘들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총책임자는 IBRA의 은행감독 기준을 발표하면서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였으나, 4월 22일 공식적인 해명 없이 3개의 정부은행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은행이 IBRA의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운용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자아냈다(Johnson 1998, pp. 46-49).

투명성뿐만 아니라 진행속도에서도 IBRA는 문제점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IBRA는 전언된 54개 은행에 대한 회계를 1998년 8월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11월까지도 단지 27개 은행에 대해서만 회계결과를 완결하였을 뿐이었다(Cameron 1999, pp. 19-20).

IBRA의 불투명한 운용, 더딘 진행속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절실했기 때문에 IBRA는 차츰 운영의 형식을 갖추어서 자기 자본비율(CAR: Capital Adequacy Ratio)에 따라 은행을 3종류로 분류한 뒤 감독 여부를 결정하였다(A군: CAR 4% 초과, B군: CAR -25%~4%, C군: -25% 미만). A군은 자생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본재구성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고, B군은 자본재구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C군은 CAR를 -25% 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파산이나 다른 은행과 병합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CAR 4%는 Basle Capital Accord 8%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이어서 A군에 포함된 은행의 자생능력이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낮은 CAR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초 150개 은행

중 54개만이 A군에 포함되어 있고, 56개가 B군, 40개가 C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1개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정부은행이 C군에 포함되었고 CAR가 -25% 미만이었지만 파산 또는 병합의 절차 없이 자본재구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IBRA 운용에 정치력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Cameron 1999, pp. 19-23).

#### 다. 국채발행

비록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자본재구성 여부의 선별기준이 확립되었고 은행부문의 문제점이 더욱 자세히 파악되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8년 11월 IMF의 의향서에서 정부로 이양된 은행에는 100%, 초기소유자와 합동으로 자본재구성하는 은행에는 필요금액의 80%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158조 루피아에 달하는 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하였고, 이 중 104조 루피아는 은행 자본재구성에, 나머지 54조 루피아는 파산한 은행의 부실채권을 보상하기 위해서 BI에 제공되었다. 당시 국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3~10년 만기 3개월 SBI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채권(95조 루피아), 5년 만기 연 12% 이자율, 10년 만기 14% 이자율 고정금리채권(9조 루피아), 만기 20년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연 3% 이자율 고정금리채권(54조 루피아)(Pardede 1999, pp. 26-30).

158조 루피아 국채발행은 은행부문 구조조정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예측은 옳았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1997년 중반에 발생하였지만 1997년 후반기와 1998년 상반기 중 은행부문은 여전히 수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 7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 은행부문 손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기간 중 축적된 손실은 총 506억 달러였고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표 4-3 참고)(Frecaut 2004, p. 40).

표 4-3. 은행부문 손실

연 도	1998년		1999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당분기 손실(조 루피아)	-65.8	-121.2	-135.3	-71.8	-40.8
축적 손실(조 루피아)	-65.8	-187.0	-322.3	-394.1	-434.9
분기 GDP	256.9	272.5	281.1	279.7	277.6
손실 연간화 GDP(%)	6.4	11.1	12.0	6.4	3.7
축적 손실 GDP(%)	6.4	17.5	29.6	36.0	39.7
환율(기간 평균, 루피아/ 달러)	12,252	7,908	8,776	7,921	7,531
손실(10억 달러)	-5.4	-15.3	-15.4	-9.1	-5.4
축적 손실(10억 달러)	-5.4	-20.7	-36.1	-45.2	-50.6

자료: Frecaut(2004), 표 1, p. 40.

또한 같은 기간 은행부문 손실의 90% 가량은 자산가치 하락에 기인한 손실충당(349억 달러)과 예대율 역전에 기인한 순이자수입 적자(103억 달러)에서 발생하였다(표 4-4 참고). 대부분의 손실이 운영비용에서 발생하였다면 구조조정을 통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손실의 대부분이 손실충당과 순이자수입 적자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였다.

표 4-4. 은행부문 손익계산서(1998년 7월~1999년 9월)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금액	총손실 대비 비중
순 이자수입	-10.3	20.3
루피아 순 이자수입	-10.7	21.1
외국환 순 이자수입	0.4	-0.7
순 비이자 수입	-3.1	6.0
총수입	-13.3	26.4
운영비용	-2.7	5.3
손실충당	-34.9	69.1
운영결과	-50.9	100.7
기타 수입 및 수수료	0.4	-0.7
세후 순이익	-50.6	100.0

자료: Frecaut(2004), 표 2, p. 41.

## 라. 재정압박

국채발행을 전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은행손실을 과소평가하였지만 정부정책을 살펴볼 때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막대한 금액의 은행손실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 몇몇 은행의 CAR를 8%까지 상승시키려고 하였지만 이후 4%까지 하향조정하여 IBRA 관리를 받는 은행 수를 줄였고 자본재구성 초기 단계에서는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였지만 이자율이 상승하는 당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채권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Pangestu, Goeltom 2001, pp. 167-169).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이 대책이 오히려 문제점을 낳았다. 일반적으로 자본재구성을 현금 또는 국채로 하든 큰 차이는 없지만 당시 국채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비현실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국채의 장부가는 시장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은행의 자산 중 국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표 4-5 참고). 예를 들어서 4개 대규모 정부은행이 합병되어 신설된 만디리 은행의 경우 자산대비 국채 비율이 78%에 달했다. 이 경우 자본재구성을 받은 은행의 CAR가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정부의 고정금리채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CAR의 과대평가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McLeod 2000, pp. 26-29). [표 4-6]에서 알 수 있듯이 IBRA 자산 장부가격의 21%만 회수될 것으로 평가되면서 CAR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높은 자산대비 국채 비율, CAR 과대평가, 건전한 은행의 최저 기준인 4% CAR를 함께 고려했을 때, A군 즉 건전하다고 분류된 은행의 건전성 자체가 의심스러워지게 되었다.

표 4-5. 2000년 9월 11개 주요 자본 재구성된 은행

(단위: 조 루피아, %)

은행	자산	국채	자산 대비 국채비율
Mandiri	232.6	181.2	78
BNI	114.3	61.8	54
BCA	96.9	59.6	62
Manamon	60.5	47.5	79
BRI	54.0	29.1	54
BTN	20.5	9.8	48
Niaga	17.6	9.5	54
BII	40.1	6.5	16
Lippo	21.8	6.0	28
Bali	5.7	5.3	94
Universal	11.3	4.2	37
합계	675.3	420.5	62

자료: Dick(2001), 표 6, p. 22.

표 4-6. 2000년 12월 IBRA의 추정된 자산가치와 회수율

(단위: 조 루피아, %)

구분	장부 가격	시장 가격	회수율
핵심 자산	256	53	21
비핵심 자산	8	4	50
결산 자산	104	35	34
자기 자본	148	16	11
합계	516	108	21

자료: Dick(2001), 표 8, p. 25.

## 마. IBRA 운영의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었다. 부실채권이 IBRA로 이전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1999년 초 50%에서

2001년 1/4분기에 23%까지 하락하였지만 이자율 상승과 경기침체 결과 당시 BI의 목표치인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5월 BI도 CAR 8%에 집중하면서 부실채권비를 5%의 목표를 포기하였다(Pangestu, Goeltom 2001, p. 167).

IBRA 활동이 순조롭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IBRA의 고위관료가 IBRA의 관리 하에 있는 기업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 8월 IBRA는 IBRA의 Deputy Chair, Vice Chair, Chair를 제외하고 IBRA와 IBRA 관리 하에 있는 기업의 겸임을 금지하였다. 그 외에도 특히 BCA, Guthrie의 팜유프랜테이션, Jakarta Outer Rig Road Project를 중심으로 IBRA와 주식매각과정에 있는 기업 간 MOU의 비리가 의심되기도 하였다(Siregar 2001, pp. 295-296).

은행부문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IBRA의 운영에서도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IBRA를 중심으로 시작된 은행구조 조정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은행부문에 제공된 유동성은 1996~99년 179조 루피아였고 은행의 자본재구성을 위해서 발행된 국채는 총 431조 루피아였다. 즉, 인도네시아 GDP의 약 50%가 은행부문 구조조정에 사용되었다(Djiwandono 2004, p. 69-70).

## 바. IBRA 조기 해체

2004년 2월에 해체되기로 계획된 IBRA는 2003년 9월 조기 해체되기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말 IBRA는 자산의 86%를 여전히 매각하지 못하는 담보상태를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IBRA는 중앙아시아은행(BCA: Bank Central Asia)과 니아가은행(Bank Niaga)을 2000년 말까지 매각하기로 계획하였지만 2002년 말까지도 두 은행의 매각을 결정하지 못했다. IBRA의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17/1999를 제정하여 IBRA가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IBRA는 이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Waslin 2003, pp. 18-20).

IBRA의 잔여자산은 공사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가 관리하는 몇 개의 자기회수지주회사(self-liquidating holding companies)로 이전되었지만 공기업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이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하는 공사부가 잔존한 자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특히 정부 관료의 심각한 부패와 잔여자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은행의 자산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예측이 팽배하다.

또한 새로운 예금자보호기관이 세워질 때까지 예금자보호 기능은 재무부로 이전되었다. 이 외에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BI가 독자적으로, 체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BI가 정부와 협조하여 은행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2004년 1월 경제조정부장관은 IBRA에 남은 40조 루피아 자산을 관리하는 정부자산관리회사(PPAN: State Owned Asset Managing Company)의 공기업 설립을 공표하였다(Kenward 2004, p. 30).

## 사. 예금보험

2004년 9월 DPR은 Law 24/2004를 통과하여 예금보험기구(LPS: Deposit Insurance Agency)를 설립하여 정부의 무한예금보호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이 법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LPS는 활동을 개시하였고 외국은행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은행이 예금보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정부의 무한보호는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사라지면서 LPS 활동개시 18개월 내에 최대 1억 루피아(당시 약 10,000달러)의 예금을 보호할 계획이다.

표 4-7. 단계적인 최대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

최대 예금보호 한도 금액	기 간
모든 예금	2006년 3월까지
50억 루피아	2006년 4월-9월
10억 루피아	2006년 10월-2007년 3월
1억 루피아	2007년 9월부터

자료: McLeod(2006), 표 2, p. 66.

LPS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획기적인 기구이지만 무한예금보호 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체계적인 예금보험을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LPS가 내세우는 예금보험의 목적은 해당 은행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액예금자 보호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와 기관 활동 개시 전인 2005년 2월 통계에 따르면 1억 루피아 이하 예금자는 전체 예금자의 98.3%로 모든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금자가 아닌 예금액을 고려할 때 1억 루피아 이하 예금액은 전체 예금액 중 32.1%에 불과하여 이 금액이 대량 인출될 경우 LPS가 이 문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이 의문은 근거 없는 의문이 아니며 전연한 바와 같이 아시아 외환위기 시 실제로 일어났다(McLeod 2006).

LPS는 소액예금에 대한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금융체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이 무한보호된다. 이 경우 예금자들이 이들 은행에 예금을 집중할 경우 실질적으로 LPS는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한예금보호와 동일한 역할을 맡게 된다. 더욱이 은행전반에 걸친 지불인출쇄도가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금보호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LPS가 정부의 기존 무한보호를 대체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LPS는 총예금액의 2.5%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불인출쇄도를 막기

에는 부족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은행 구제에 사용된 금액은 금융위기 붕괴 직전인 1997년 6월 예금액의 136%인 점을 감안할 때 LPS의 한계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예금보호액이 부족할 경우 초기자본으로, 초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에서 차입하기 때문에 결국 LPS는 정부의 무한 보호를 대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5월 무한보호 개시 몇 개월 후에도 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던 민간은행 BCA에서 지불인출쇄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CAR 인상과 같은 금융기관 감독 강화나 외국 은행설립 촉진을 통한 국내외 은행의 체질개선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LPS는 효과적으로 지불인출쇄도를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McLeod 2006). 현재까지 LPS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 3. 노동법의 변화

#### 가. 외환위기 이전 노동법 운용

노동법은 대체로 정부가 고용계약과 근로조건을 규제하여 노사관계에 깊이 관여하는 협동조합모형과 노사관계를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계약모형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모형을 따르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 한 영향으로 독립 전부터 식민 정부는 이미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다.

독립 후 수하르토 정권은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를 희생하고라도 고도성장을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대체로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를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집단노동협약법(Law 21/1954 on Collective Labor Agreements)에서 모든 노조는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노조를 등록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노조 수 증가를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등록 장관령(Ministerial Degree 1/1975 on Trade Union Registration)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단일노조만 허용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등록 장관규정(Ministerial Regulation 90/1955 on Trade Union Registration)에 미등록한 노조를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미등록 노조에 공권력을 발동하여 노조활동 자체를 억제하였다. 노동쟁의 발생 시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쟁의조정법(Law 22/1957 on Labor Dispute Settlement)에 따라 모든 노동쟁의가 자발적 또는 중재자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는 처음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조정되도록 한 법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용자 위주로 노동쟁의를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동맹파업이나 직장폐쇄 시에도 정부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하게 만들어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철저하게 억제하였다.

#### 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근로자권리 향상

수하르토 정권 붕괴 후 1998~200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8개의 핵심조약 중 기존 3개에 추가적으로 5개를 국회에 비준하면서 근로자 권리 향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조합법(Law 21/2000 on Trade Unions)에서 단일 사업체 내 복수노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하 30여 년 동안 억제된 근로자의 권리가 몇 개의 법률로 강화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더욱이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본의 국외이탈을 막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근로자 권리 향상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1월 인도네시아의 신발제조업연합회(Association of

Shoe Manufacturers)는 4개의 외국기업과 8개의 국내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동중업체 경쟁국인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합회는 노동법이 근로자 권리를 지나치게 옹호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하였다. 며칠 후 직물, 전자제품, 장난감 연합회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 연합회들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측이 특히 문제시 삼는 노동법 조항은 퇴직수당과 보상에 관한 근로퇴직법(Labor Severance Law 150/2000)이었다. 이 법의 1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6개월간 이전 임금의 최소 75%까지 주어야 하고 18항에서는 심각하거나 범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같은 권리가 없지만 여전히 근로기간에 비례한 퇴직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이 법 때문에 노동쟁의가 빈번해졌다고 주장하였다(Dick 2001, pp. 28-29).

#### 다. 노동법 13/2003

Kadin을 포함한 사용자 측이 친기업적 법안 상정과 통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국회는 사용자 측의 반발을 산 근로퇴직법을 포함하여 기존 13개의 법안을 대체하면서 2003년 2월 노동법(Law 13/2003 on Labor)을 통과시켰다(MacIntyre, Sesosudarmo 2003, pp. 148-149). 노동계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아웃소싱과 한시적 근로계약 합법화, 파업권리 제한, 범법행위를 이유로 판결 전 해고 허용 등을 법제화하여 노동법을 더욱 친기업, 반근로자 위주로 수정하였다고 반발하였다.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노동부는 이 법을 친근로자 위주로 개정하려 하였지만 실질적인 개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노동법 13/2003은 새롭게 제정된 법이지만 세부항목은 이미 기존 법규에 명시된 내용을 종합했기 때문에 이 법이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고용법

(Law 1/1951 on the Employment Act), 노동에 관한 근본조항법(Law 14/1969 on Fundamental Provisions of Labor),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규칙(Government Regulation 8/1981 on Wages Protection), 회사규칙에 관한 장관규칙(Ministerial Regulation 2/1978 on Company Regulations), 한시적 계약에 관한 장관규칙(Ministerial Regulation 2/1993 on Specified Time Contract), 근로종료와 퇴직수당 지불에 관한 장관규칙(Ministerial Regulation 150/2000 on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and Severance Payments), 집단근로협약에 관한 법(Law 21/1954 on Collective Labor Agreements) 등에 이미 기술되어 있다.

노동계는 노동법 13/2003가 친기업적이라고 반발하였지만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노동법에 비해서는 오히려 친근로자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측이 특히 강조한 해고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임금 대비 해고비용의 비중은 108.3%로 태국의 54.3%에 비해서 크게 높았고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88%)와 필리핀(91%)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중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쟁국인 베트남의 86.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사용자 측의 주장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표 4-8. 동남아시아 몇 개국의 고용 및 해고 지수 비교(2006년) ■

측 정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채용난이도 지수	0	56	33	0	61
근로시간 경직성 지수	20	40	20	40	40
해고난이도 지수	10	20	0	70	50
고용 경직성 지수*	10	39	18	37	50
임금대비 고용 비용 비율	12.8	8.5	5.2	17	10
해고 비용(weeks of wages)	88	91	54.3	86.7	108.3

주: \* 위 세 지수의 단순평균이다.

자료: Manning, Roesad(2007), 표 6의 일부, p. 80.

## 라. 노동법의 친기업적 개정 움직임과 실패

직물, 의류, 신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을 상승과 함께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진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경제추세를 전환하고자 2005년 초 노동부는 경제계 및 노동계와 토론을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06년 2월 경제조정부는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개정요구안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표 4-9]에 기술된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노동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상정하였다. 노동부가 이 요구안에서 강조한 정책분야는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환경 조성이고 따라서 활동 수도 13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 분야의 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목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즉 신속한 고용과 해고이다.

■ 표 4-9. 2006년 2월 투자환경개선 패키지 중 노동정책 ■

주요 정책 항목	활동 수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조성	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보호 정책 개선	1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저렴하고, 공정하게 해결	2
외국의인근로자 근로허가의 신속한 처리	6
유연하고 생산적인 노동시장 창조	1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지역 간 이주 개발 패러다임 진전	1

자료: Manning, Roesad 2006, 표 3의 일부, p. 15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주요 내용은 [표 4-10]에 기술된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경제계는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계약직 노동 기간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직 업무도 비정규 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하여 전체 근로자 중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길 원하였다. 또한 해고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고에 따른 근속수당의 기준을 24년 이

상에서 25년 이상으로 1년 연장하였고 월 급여의 10배에서 6배로 하향조정을 요구하였다.

표 4-10. 2006년 기업인의 노동법 개정 요구안

구 분	2003년 노동법	개정 요구안
계약직 노동의 기간	2년 계약 후 1년 연장	5년 계약 후 재연장 불허
계약직 업무	분야정규 업무 제외	모든 업무
아웃소싱 분야	임시적 성격의 업무	모든 업무
장기 휴가	6년 근무 후 1달	제공회사 규정에 따라 제공
불법파업자 해고	장관 조례에 따름	해고 및 고소
해고에 따른 근속수당	24년 이상 근속 시 월 급여의 10배	25년 이상 근속 시 월 급여의 6배

자료: 국제노동협력원(2009), p. 63.

노동부와 경제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2006년 3~5월, 특히 4월 노동계는 이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며 마련되어 있는 사회보장조차 관료의 부패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퇴직수당을 하향 조정하고 고용안정을 축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개정요구안을 철회하였고 이후 이 법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Manning, Roesad, 2006, pp, 163-169).

#### 마.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 외에 최저임금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은 1970년대 초 인도네시아에 이미 도입되었지만 저임금노동을 통한 고도성장을 추진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엄

격히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말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고 노동운동도 활발해졌다. 비슷한 시기 미국과 유럽연합은 본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근로자 권익보호가 미약하면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와 같은 수출혜택을 철폐하겠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압력이 국내외에서 나타나자 198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저임금체계를 상향조정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에도 예전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였지만 최저임금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을 왜곡할 우려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1990년 실질평균임금이 전년대비 12% 이상 하락한 반면 실질최저임금은 약 50% 급증하였다. 1994년에도 실질평균임금은 전년대비 약 2% 하락하였지만 실질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30%나 증가하였다(Suryahadi *et a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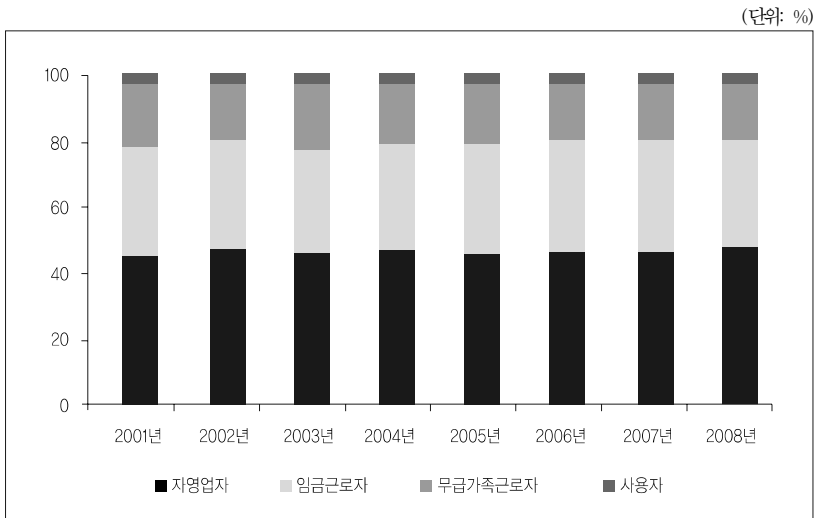
실질최저임금이 실질평균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소한의 신체적 필요”에서 “최소한의 생존 필요”로 최저임금 산출기준 자체를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둔화되었지만 2001년 실질최저임금은 20% 상승하였고 같은 해 실질최저임금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15% 추가 상승하였다(Manning, Roesad 2007).

## 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악영향

근로자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수단까지 바람직한지는 불확실하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구조는 전체 노동시장 대비 비정규노동시장(informal labor market)

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점이다. 비정규노동시장 비중은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림 4-4]는 한 예를 보여준다. 2001~08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자영업과 무급가족근로자가 총고용인구의 63~65%를 차지하고 사용자 비중까지 추가적으로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총고용인구에서 최저임금대상의 비중은 약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그림 4-4. 인도네시아의 위상별 고용구조 추이 ■



자료: LABORST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인도네시아와 같이 전체 노동시장 대비 비정규노동시장의 비중이 큰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정규노동시장(formal labor market)에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실질임금상승을 경험하지만, 정규노동시장에서 임금상승압박을 경험하는 기업은 고용을 기피하거나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여 정규노동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 특히 청년층, 여성, 낮은 교육수준의 근로자를 포함한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 증가, 비정규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증가와 임금 하락으로

결과적으로 비정규노동시장과 정규노동시장의 이분화 및 빈부격차 심화가 발생하게 되며 Suryahadi *et al.*(2003)은 이에 대한 실증근거를 제공한다.

### 사. 지방분권하의 최저임금제

2000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지만 2001년 지방분권 개시와 함께 도(provincial)와 구(district/municipality)단위에서 각 지역의 기본생활수준에 맞게 최저임금을 매년 검토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최저임금제의 지방분권화로 최저임금산정 시 지역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수준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지만 지방선거 직선제 도입으로 경제논리보다 포퓰리즘에 의해 최저임금이 산정될 경우 지방단위에서의 최저임금 설정이 반드시 합리적인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방분권이 시작되기 전에는 최저임금산정기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거의 동일하였지만 지방분권이 시작된 2001년 1월부터 기본생활수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면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정되었다(표 4-11 참고)(Alisjahbana, Manning 2002).

■ 표 4-11.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연 도	최저임금산정 기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1996년 4월	0.52	0.48
1999년 1월	1.00	1.00
2000년 1월	1.05	1.02
2001년 1월	1.36	1.12
2002년 1월	1.67	1.26

주: 1998=100

자료: Alisjahbana, Manning.(2002), 표 6의 일부, p. 299.

## 아. 기타 노동 관련법

인도네시아의 노동 관련법 중 중요한 법은 노동법 13/2003과 최저임금제이지만 여타 다른 법도 존재한다. 이들 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사관계분쟁조정법(Law 2/2004 on Industrial Relations Disputes Settlement)을 마련하여 노사관계분쟁을 처음에는 자발적 타협, 자발적 타협 불가 시 중재, 중재 불복 시 노사관계법원(Industrial Relations Court)에 제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이기 때문에 근로 권리와 해고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주노동자보호장관령(Ministerial Decree 104A/2002 on Migrant Worker Protection)을 기초로 이주노동자보호법(Law 39/2004 on Migrant Worker Protection)을 제정하여 법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에 비해서 이주노동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실질적으로 무용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Law 40/2004 on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은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종합의료보험, 연금, 노령 혜택, 기타 혜택을 약속하고 있지만 경제계와 노동계는 법안계획단계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이 혜택에 드는 비용을 임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임금상승압박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 4.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 가. 인도네시아의 부패 정도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의 정도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국가 간 비교에 널리 쓰이는 지표는 국제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이다. 1996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부패를 반영한다(표 4-12 참고). 조사대상국가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인도네시아의 수치는 대체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매년 조사대상국가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조사대상국가가 100개라고 가정한 상대순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70위보다 나은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

표 4-12. 부패인식지수

연 도	점수 <sup>1)</sup>	절대순위 <sup>2)</sup>	조사대상국가	상대순위 <sup>3)</sup>
1996	2.65	45	54	83.3
1997	2.72	46	52	88.5
1998	1.70	80	85	94.1
1999	2.00	96	99	97.0
2000	1.70	85	90	94.4
2001	1.90	88	91	96.7
2002	1.90	96	102	94.1
2003	1.90	122	133	91.7
2004	2.00	133	145	91.7
2005	2.20	137	158	86.7
2006	2.40	130	163	79.8
2007	2.30	143	179	79.9
2008	2.60	126	180	70.0

주: 1) 10점이 가장 청렴한 국가를 나타냄.

2)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함.

3) 조사대상국가가 100개라고 가정한 상대순위임.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함.

자료: 국제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는 부패의 추이 파악과 국가 간 비교에는 효과적이

지만 부패의 심각성을 현실감 있게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생산비용 대비 뇌물의 비율이 더욱 현실감 있는 부패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2001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 부문, 지역, 수출여부, 소유국가, 원유/가스 자원 지역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대체로 생산비용의 10% 내외를 뇌물에 사용하였다(표 4-13 참고). 이 수치는 생산비용 중 뇌물만의 비중을 표시한다. 뇌물 외에도 부패로 인한 더딘 행정절차, 뇌물액수결정을 위한 협상 등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부패로 인해 생산비가 최소 10%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3. 생산비용 대비 뇌물의 비율(2001년) ▮

(단위: %)

구 분	평 균	표본 수
크기(연판매수입)		
소(10억 루피아 미만)	10.4	488
중소(10~50억 루피아)	11.6	322
대소(50~100억 루피아)	9.6	324
대(100억 루피아 초과)	8.2	195
부 문		
제조업	9.3	646
농 업	10.3	69
서비스업	11.3	618
지 역		
도 시	11.8	617
비도시	10.3	716
수출여부		
수출 <sup>1)</sup>	9.7	371
내 수	10.4	962
소유국가		
외국 <sup>2)</sup>	12.0	167
국 내	10.2	1,164
원유/가스 자원 지역		
원 유 <sup>3)</sup>	12.8	162
비 원유	9.8	1,171

주: 1) 판매수입의 최소 5% 수출

2) 외국인 소유비율 최소 5%

3) 지역 GDP의 최소 5%가 원유와 가스로 구성됨.

자료: Kuncoro(2004).

## 나. 수하르토 집권 시 부패

Lindsey(2000)는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부패의 시작점을 1959년 7월 대통령중심제인 1945년 헌법으로의 회귀에서 찾는다. 더 이른 시점은 헌법 회기 2년 전 수카르노가 군정을 시작하는 해로 거슬러갈 수 있다. 헌법 회기 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 행정부의 권력 독점은 수하르토 정권 시기에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Law 14/1970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법무부에 귀속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 위헌판정 여부 심사권을 박탈당하면서 사법부가 직접 또는 입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능력을 박탈당했다. 이와 같이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자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해지고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공식적인 법을 통하기보다는 뇌물, 정실, 폭력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 또는 조직 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자 사법부에 근무를 지원하는 인력의 능력이 하락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도 재교육을 통한 능력 신장보다 부패를 통한 축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 사법부는 부패를 쫓는 사람들의 집합장소로 전락하였다(Lindsey 2001).

수하르토 집권 시에는 수하르토가 부패를 관리하였고 이 부패조직은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식을 보였다(McLeod 2005). 그리하여 수하르토의 관리 하에서 부패의 수혜자는 대기업, 대규모 외국기업, 직계가족, 프랜차이즈는 사법부/정당, 사법부, 군부/경찰, 관료/일반 기구, 공사, 조세대상은 국내 기업/시민, 소규모 외국기업이었다. 3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이 조직에 의해 수하르토는 경제성장을 도왔으며, 조세대상은 경제성장의 대가로 부패에 참가하였고 이 규칙에 따르는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였다.

#### 다.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

수하르토 정권 몰락과 함께 부패조직을 관리할 중심인물이 사라지자 수입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불확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은 법안통과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민주주의 확산에 따라 정당은 선거운동자금을 요구했으며 파산신청이 늘어나면서 사법부는 뇌물을 준 쪽(주로 파산 위험의 기업)이 원하는 판결을 내렸다. 군부와 경찰은 마약, 매춘과 같은 개인조직에 참여하였고, 2001년 1월 지방분권을 시작으로 지방정부관료는 불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즉, 수하르토 정권 전의 부패는 예측가능했던 반면 그 이후의 부패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전자의 경우, 부패는 일종의 세금으로 간주되어 정부, 기업, 개인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지만, 후자의 경우 뇌물 대상과 액수가 불확실하기 미래 계획이 어려워졌다. 외국인투자자 급감하고 외국인투자수준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는 사실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수하르토 정권 몰락 직후 밝혀진 주요 부패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9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민간은행 중 하나인 발리은행(Bank Bali)의 회계감사에서 약 8,000만 달러가 10월 대통령 선출에 참여하는 MPR 의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발리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IBRA 등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가 연루되었다(Booth 1999, pp. 5-6). 또한 텍스마코(Texmaco), 가자 통갈(Gajah Tunggal), 바리토 퍼시픽(Barito Pacific)과 같은 대기업이 여러 정당과 후원관계를 형성한 점은 익히 알려져 있었다(Dick 2001, p. 13). 그러나 투자·공사부(Minister for Investment and State Enterprises) 장관 수카르디(Laksamana Sukardi)가 수하르토가 BI를 통해서 텍스마코에 10억 달러의 저리대출을 한 문서를 공개했을 때 수카르디는 해임되었고 이 사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고위관리가 부패척결에는 관심이 없고 부패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물류기관인 불록의 부사장인 사푸안(Sapuan)은 와히드 대통령의 입력으로 임원연금펀드(staff pension fund)에서 약 4백만 달러를 아체의 인도적 구호사업 명목으로 유용했다고 고백하였다(McLeod 2000, pp. 7-8). 2001년 9월 정부개발자금지감독관(State Development Finance Comptroller)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국부펀드(state funds) 중 10조 3,000억 루피아가 유용되었다(Siregar 2001, pp. 297-298). 2002년 6월 당시에도 100개 이상의 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제 금융을 유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어떤 은행도 조사를 받지 않았고 세관원과 연계된 밀수는 여전히 만연하였다(Athukorala 2002, p. 144).

## 라.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척결 방안과 한계

수하르토 정권하에서 감추어졌던 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부패척결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다(Lindsey 2000).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정당관련 신설법(2/1999), 신선거법(3/1999), DPR과 MPR 구성원 결정에 대한 신설법(4/1999), 노동조합에 대한 신설안(대통령령 83/1998), 언론기관허가시스템 언론규제(정정부 규정 1/1984) 철폐, 반체제법(5/1969) 철폐, 법무부로부터의 재판권 독립에 관한 법(14/1970) 개정, 1905~06년 네덜란드 규정을 개정한 신파산법(PP 1/1998), 신경쟁법(5/1999), 소비자보호규정(8/1999), 지방분권(22/1999). 이 외에도 정부예산 투명성 제고와 감시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부패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사법권 행사, 임금 인상을 포함한 공무원제도 개선 등도 이루어졌다(Hamilton-Hart 2001).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시행된 다양한 법과 규정은 부패척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파산을 담당하는 상거래 법원에서는 사법처리의 독립성을 위해서 민간 부문의 재판관이 재판을 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거래 법원

의 판결에 불복하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거래 법원이 최종적으로 독립적일 수는 없었다. 더욱이 대법원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상거래 법원이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채무자에 이로운 판결을 선고하였다(Fane 2000, p. 36).

또한 공무원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2000년 3월 전국 음부즈맨 위원회(KON: National Ombudsman's Commission)가 대통령령 44/2000을 통해서 신설되었지만 KON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조사에 응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해당 건물로의 접근 허용을 강제할 수 없었다. 또한 KON의 권고조치는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조치는 경찰 또는 검찰에 이전해야 했다. 여기에 예산까지 부족해서 KON은 실제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였다.

법률 28/1999와 대통령령 81/1999를 통해서 2001년 1월에 신설된 공무원재산회계위원회(KPKPN: Commission to Audit the Wealth of State Officials) 역시 고위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에 의존하여 재산을 조사하였고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권을 결여하였다(Sherlock 2002). 이외에도 대법원은 사법제도에서 부패를 조사하고 처벌의 책임을 지고 있던 부패척결합동팀(Joint Team for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을 불법기관으로 판결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패척결이 더욱 어려워졌다(Siregar 2001, p. 298).

#### 마.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2004년 인도네시아의 첫 대통령 직선에서 압승한 유도요노는 부패척결을 국가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고 그 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부패척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신설 또는 확장되

었다. 부패척결위원회(KPK: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반돈세탁센터(Anti-Money Laundering Center), 전국옴부즈맨(National Ombudsman), 최고감사기관(BPK: Supreme Audit Agency), 부패척결 조정팀(Timtas Tipikor: Coordinating Team for Eliminating Corruption). 이 중 유도요노의 임기 첫 1년 정도 되는 시점인 2005년 8월까지 KPK와 Timtas Tipikor는 25개의 사안을 처리하였고 법무청(Attorney General's Office)은 고위 관료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포함한 233개 사안을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출하였다(Sen, Steer 2005, p. 300).

그러하여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 집권 때에는 부패연루로 의심을 받았던 고위관료들이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들에게 이로운 판결을 받은 바와 달리 유도요노가 집권하면서 부패연루로 의심을 받던 고위관료들이 신속한 조사와 상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부패척결을 위한 비정부 단체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ndonesia Corruption Watch)에 따르면 2005년에만 450건의 사안이 법원에서 다루어졌고 이는 2001년 7월~2004년 10월 동안의 메가와티 정부의 200여 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Kuncoro, Resosudarmo 2006, p. 15).

그러나 부패척결 초기에는 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중앙관료보다 지방관료의 부패처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05년 4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아체 주지사 푸테(Abdullah Puteh)가 정부예산 유용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 정부소유 만디리은행과 선거 위원회의 고위관료들이 부패혐의로 입건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종의 조폐 공사인 PT Peruri의 사장과 2명의 부하가 대규모 유용혐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McLeod 2005, pp. 152-153). 2008년 11월 최고감사기구는 2003년 6월 당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임원회의에서 1,100만 달러 중 2/3는 금융스캔들에 연루된 BI 고위관료의 법적 방어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DPR의 금융·은행·공사위원회에 주어진 사실이 밝혔지만 정치적 권력이 약한 피의자

만 사법제제를 받았다(Kong, Ramayandi 2008, pp. 30-31).

그러나 부패척결이 심화되면서 중앙관료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메가와티 집권 당시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장관을 지내던 무나와(Said Agil Hussein Al Munawar)가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았고 전직 또는 현직 공사 사장이 부패혐의로 기소되었다(Kuncoro, Resosudarmo 2006, p. 16).

지방관료에 이어 중앙관료가 부패혐의로 처벌을 받기 시작한 데 이어 2005년 8월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가 신설되어 비효율적인 사법부의 근원인 판사의 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하였다. 사법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법원과 판사의 업무성과를 감시하고 대법원장 지명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은 대법원에 사법처리를 조언할 수는 있지만 집행할 수는 없고 부정에 의한 판결을 취하할 권한도 없어서 KON이나 KPKPN과 같이 중이호랑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Sen, Steer 2005, p. 300). 특히 수하르토 집권 시기부터 재판관의 부패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현직 부패 재판관이 척결되는 동시에 청렴한 재판관이 새로 임용되는 기간 동안 사법부의 부패는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최근에는 이미 발생한 부패를 척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재무부는 방만했던 부서를 통합하며 부서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무부는 능력에 따라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였고 채용 및 승진에서도 외부인사 영입과 같이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체제를 재편성하였다. 중앙자바의 솔로(Solo)와 스라젠(Sragen)과 같은 지방정부는 기업이

적 정신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2002년 공사부(Minister for State-Owned Enterprises)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장관령(KEP-09A/MBU/2005)에 기초한 공사임원지원자의 적격심사(Fit and Proper Tests of Candidates for Membership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tate Enterprises)로 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서 공사부는 내부인사발탁을 지양하고 외부지원자를 고려하였으며 외부기관이 적격심사를 수행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McLeod 2008, pp. 196-207).

2003년 재정법(Law 17/2003 on State Finance)을 시작으로 재무와 재정 감사에 대한 보충법(a complementary law on the state treasury, the auditing of state finances)이 추가되면서 공공부문의 회계개혁도 단행되었다(Kuncoro, Widodo, LcLeod 2009, pp. 171-174; Ginting 2003). 이후 2005년 복식회계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회계 표준이 도입되면서 공공부문 회계개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부패방지 장치가 부족하며 또한 사법부의 부패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개혁이 비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부족, 중앙정부로부터의 비일관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인사관리에 대한 자율권 결여 등의 문제로 새로운 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정착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헌법재판소가 반부패법원의 법적 타당성을 부정하고 2009년 12월 까지 이 법원이 존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2009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반부패법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반부패법원이 법적 권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고, KPK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반부패법원은 기존 법원과 달리 학계 또는 주요 사법체제 외부에서 재판관을 영입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임사판사의 비중이 줄고 정사판사의 비중이 늘어 반부패법원의 독립성이 반드시

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KPK는 부패로 얼룩진 경찰과 달리 부패척결의 일선에 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보통 법원은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의 62%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평균징역기간도 6개월 미만인 데 반해 KPK는 설립 이후 판결한 90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평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KPK가 성공하면서 KPK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이 KPK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KPK의 고위관료 본인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EIU 2009).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실시된 일련의 부패척결활동의 결과 인도네시아의 부패정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표 4-12]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부패정도가 적어도 심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직전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 지표는 2.72로 [표 4-12]에 나타난 기간 중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수하르토 정권이 몰락한 1998년 5월부터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가 짧은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하였고 2004년 유도요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인도네시아의 지수는 2.00 이하로 추락하였다. 그러나 유도요노의 집권과 함께 지수는 대체로 상승세로 돌아서서 부패정도가 소폭이나마 개선되었다. 상대순위의 추세도 지수의 추세와 비슷하지만 지수 측면에 비해서 상대순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욱 개선되었다. 1996년 부패인식지수는 2.65, 상대순위는 83.3위인 데 반해 2008년 지수는 2.60, 상대순위는 70.0위였다. 물론 인도네시아보다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가 조사대상국가에 추가되었을 때 인도네시아의 상대순위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부패정도가 반드시 개선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수와 상대순위의 비슷한 개선 추세를 고려할 때 유도요노 집권 후 인도네시아의 부패정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5. 소결

태국정부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보다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하고 인도네시아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로 이어지는 단기 정권은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정권의 변화만큼이나 경제위기극복 정책도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많은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 유도요노가 취임하면서 체계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였고 2009년 재임을 하면서 개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특히 비효율적인 정부은행의 비대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예금보험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최저임금, 단발적인 부패척결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다.

# 제5장

---

## 결론

우리정부와 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과거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 역사 중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경제 및 정치 변화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기존에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경제 외에 정치, 사회에 초점을 맞추거나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도 금융, 노동, 부패 관련 내용을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더욱이 대부분 자료의 연구대상 시기는 2000년 이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인도네시아의 경제변화를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쓰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3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정치 변화를 개관하면서 같은 기간 일어난 경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1998년 5월 수하르토가 국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30여 년 간의 독재정권에 서 퇴진한 후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가 단기간 정권을 잡으며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정치 사안 중 하나는 헌법개정이다. 헌법이 개정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고, 실제로 2004년 유도요노가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 유도요노가 재선에 성공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정국은 대체로 혼란스러웠고 그 이후에도 정도는 악화되었지만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2001년에는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시행착오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방분권과 함께 부패도 지방분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동티모르, 아체, 서파푸아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가 천연자원 수입의 대부분을 자카르타로 이전한 결과 이 지역은 천연자원 수입의 주요 수혜자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며 동티모르는 결국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였고 아체와 서파푸아는 독립에는 실패하였지만 자치권을 얻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극우이슬람세력이 서양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켜 정국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제부문을 다루었다. 태국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전 아시아 지역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위기가 가장 심했고 회복속도도 가장 더디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였지만 정권교체가 잦으면서 일관된 대응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경제부문 중에서도 은행, 노동법, 부패를 구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은행부문의 대출자산이 부실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IBRA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초기 대규모 국제발행으로 재정

압박의 우려가 높았지만 추후 유가 상승 호재로 재정압박의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그러나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정부은행이 파산 또는 민간 이전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화하여 구조조정은 완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IBRA가 조기해체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시 경험한 지불인출쇄도를 방지하고자 예금보험을 설립하였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노동법 13/2003을 중심으로 친근로자적으로 전환하였다. 노동법 자체는 친근로자적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운용에서 얼마나 친근로자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6년 경제계가 이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노동법은 실질적인 운용에서도 과거에 비해 친근로자적이라고 판단된다. 친근로자적인 노동법 외에도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에 비해서 그다지 낮지 않고 평균임금보다 빠르게 성장한 점도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이 점차 친근로자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총근로인구의 1/3만이 노동법과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노동제도가 총근로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부패척결은 하비비 정권부터 논의되어 왔고 산발적으로 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이 처벌되었다. 그러나 부패척결을 본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인물은 유도요노이고, 유도요노가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부패척결은 관련인물 처벌에 머물렀을 뿐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장치는 미비하다. 단, 최근 부패방지를 위해서 회계제도가 개선되고 공무원의 임금이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도네시아의 부패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 안정을 보이며 은행, 노동법, 부패 측면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정부와 기업의 진출 전망이 밝

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정부와 기업은 2007년 제정된 신투자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고려해 봄 직하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이후에도 GDP 대비 FDI 비율이 개선되지 않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를 느꼈고, 2006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환경개선 패키지(대통령령 3/2006)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 중 일부인 신투자법안은 2006년 3월 국회에 제출된 후 2007년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다음 달 발효되었다. 신투자법은 기존에 산재해 있던 투자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법적 지위, 사유재산권 강화, 투자 금지 또는 제한 부문 명확화, 폭넓은 세제 혜택, 간소화된 투자 절차 등 투자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자세한 내용은 글상자 3 참고).

우리기업은 신투자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진출 또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정부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향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규모를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은 정부의 개발원조증액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사회기반시설 부문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전망이 밝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최근 경제성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유도요노는 2기 취임 시 1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회기반시설 증설을 꼽으면서 이 부문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과 규제 개혁, 정부운용사업의 효과개선,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세 개 부문을 큰 가지로 한 사회기반시설정책 지침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2009년 2월 2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자금(Indonesia Infrastructure Fund)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자금을 마련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가적으로

같은 해 12월 3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자본 1억 700만 달러로 사회기반 시설 보증자금(Infrastructure Guarantee Fund)이라는 정부소유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가 정부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시 이를 보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험혜택에 필요한 보험료를 시중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투자자를 유인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투자에서 특히 어려운 과정인 토지매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매입비용이 시중가격보다 높을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차액을 보상하고 토지회전자금을 마련하여 토지매입자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유인은 장기적으로 투자증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이고 있는 노력은 그 중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 ■ 글상자 3. 신투자법의 주요 내용 ■

법적지위:	내국인과 외국인투자자의 동등한 법적 지위 보장.
투자보호:	투자의 국유화와 몰수로부터 보호, 외국인 수입의 국외송금 가능, 과거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던 강제적인 자산매각과 제한된 투자 기간 조항 폐지.
분쟁해결:	정부와 외국인투자자 간 분쟁 시 국제기관의 조정 의무화.
사유재산권:	토지경작권 최대 35년에서 95년, 건축권 최대 30년에서 80년, 토지사용권 최대 25년에서 75년으로 연장.
이 만:	외국인근로자정착절차 간소화와 4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자격 부여.
세제혜택: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 소득세,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토지 및 건물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상당수의 고용창출, 인프라 구축사업, 기술이전 촉진,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개척산업에 관여.
감독과 보고:	투자조정청장은 장관의 위치로 승격되었고 대통령에 직접 보고 투자허가승인 기간을 평균 97일에서 30일로 줄이기 위해서 투자조정청은 투자허가발급과 서비스 센터로 재구성.

자료: EIU(2007).

2008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아직 2,254달러에 불과하여 아직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구매력은 낮은 편이다.<sup>16)</sup> 또한 부패인식지수 등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성장이 향후 얼마나 지속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에 동반된 경제 및 정치 혼란기를 거친 후 유도요소가 2004년과 2009년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6%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점은 인도네시아의 밝은 경제전망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재정악화로 확충 및 유지에 소홀했던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정부와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국제노동협력원. 2009.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현지 근로자들과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무관리 전략』. 서울: 국제노동협력원.

변해철. 2004. 「인도네시아 헌법 개관」. 『아시아 법제연구』, 2. 한국법제연구원.

### ●● 영문자료

Alisjahbana, Armida S., and Chris Manning. 2002.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8(3), pp. 277-305.

Arndt, W. H., and Hal Hill eds. 1999. *Southeast Asia's Economic Crisis: Origins, Lessons, and the Way Forwar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ASEAN. 2009.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8*. Jakarta: ASEAN.

\_\_\_\_\_. 2010. *ASEAN Community in Figures 2009*. Jakarta: ASEAN.

Athukorala, Preme-chandra. 2002.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8(2), pp. 141-162.

Bahl, Roy. 2002. *Fiscal Decentralization in Indonesia: The First Year in Review and Challenges Ahead*. Center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Informal Sector(IRIS), College Park, MD: University of Maryland.

- Booth, Anne. 199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5(3), pp. 3-38.
- Cameron, Lisa. 199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5(1), pp. 3-40.
- Cribb, R. B., and Colin Brown. 1996. *Modern Indonesia: A History Since 1945*. New York: Longman.
- Dick, Howard. 2001.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7(1), pp. 7-41.
- Dick, Howard, Vincent J. H. Houben, J. Thomas Lindblad, and Thee Kian Wie. 2002. *The Emergence of a National Economy: An Economic History of Indonesia, 1800-2000*. Crows Nest, Australia: Asi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
- Djiwandono, J. Soedradjad. 2004. Liquidity support to banks during Indonesia's financial crisi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0(1), 59-75.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7. "Indonesia Regulations: Investment Law-key Points." *ViewsWire*.(May 18)
- \_\_\_\_\_. 2009. "Indonesia Regulations: Anti-corruption Court Law Raises Concerns." *ViewsWire*.(September 30)
- Ellis, Andrew. 2002. "The Indonesian Constitutional Transition: Conservatism or Fundamental Change?" *Singapor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6(1), pp. 1-38.
- Enoch, Charles, Olivier Frecaut, and Arto Kovanen. 2003. "Indonesia's Banking Crisis: What Happened and What did We Learn?" 39(1),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9(1), pp. 75-92.
- Evans, Kevin. 1998.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4(3), pp. 5-36.

- Fane, George. 2000.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6(1), pp. 13-44.
- Frecaut, Olivier. 2004. "Indonesia's Banking Crisis: A New Perspective on \$50 Billion of Losse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0(1), pp. 37-57.
- Geoff, Forrester ed. 1999. *Post-Soeharto Indonesia: Renewal or Chao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Ginting Edimon. 2003. "The State Finance Law: Overlooked and Undervalued."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9(3), pp. 353-357.
- Hamilton-Hart, Natasha. 2001. "Anti-corruption Strategies in Indonesia."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7(1), pp. 65-82.
- Hill, Hal. 2000. *The Indonesian Econom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drayana, Denny. 2008. *Indonesian Constitutional Reform 1999-2002: An Evaluation of Constitutional-Making in Transition*. Jakarta: Kompas Book Publishing.
- Johnson, Colin. 1998. "Survey of Recent Development."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4(2), pp. 3-60.
- Kenward, Lloyd R. 2004.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0(1), pp. 9-35.
- Kong, Tao, and Arief Ramayandi. 2008.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4(1), pp. 7-32.
- Kuncoro, Ari, and Budy P. Resosudarmo. 2006.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2(1), pp. 7-31.
- Kuncoro, Ari. 2004. "Bribery in Indonesia: Some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0(3), pp. 329-354.
- Kuncoro, Mudrajad, Tri Widodo, and Ross McLeod. 200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5(2), pp. 151-176.
- Lindsey, Tim. 2000. "Black Letter, Black Market and Bad Faith: Corruption and the Failure of Law Reform." In Chris Manning & Peter van Diermen eds. *Indonesia in Transition: Social Aspects of Reformasi and Crisis*, pp. 278-292. Singapore: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2001. "The Criminal State: Premanisme and the New Indonesia." In Grayson Lloyd & Shannon Smith eds. *Indonesia Today: Challenges of History*. Singapore: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 MacIntyre, Andrew and Budy P. Resosudarmo. 2003.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9(2), pp. 133-156.
- Manning, Chris, and Kurnya Roesad. 2007. "The Manpower Law of 2003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Genesis, Key Articles and Potential Impact."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3(1), pp. 59-86.
- Manning, Chris, and Peter van Diermen. eds. 2000. *Indonesia in Transition: Social Aspects of Reformasi and Crisi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McLeod, Ross H. 2000.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6(2), pp. 5-40.
- \_\_\_\_\_. 2005. The struggle to regain effective government under democracy in Indonesia.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1(3), 367-386.
- McLeod, Ross H. 2006. "Indonesia's New Deposit Guarantee Law."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2(1), pp. 59-78.

- \_\_\_\_\_.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4(2), pp. 183-208.
- Pangestu, Mari and Miranda Swaray Goeltom. 2001.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7(2), pp. 141-171.
- Pardede, Raden. 1999.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5(2), pp. 3-39.
- Radelet, Steven, and Jeffrey Sachs. 2000. "The Onset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Paul Krugman ed. *Currency Crisis*, pp. 105-162.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naldi, Taufik, Marini Purnomo, and Dewi Damayanti. 2007. *Fighting corruption in decentralized Indonesia*. Mimeo.
- Sen, Kunal, and Liesbet Steer. 2005.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1(3), pp. 279-304.
- Sherlock, Stephen. 2002. "Combating Corruption in Indonesia? The Ombudsman and the Assets Auditing Commission."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8(3), pp. 367-383.
- Siregar, Reza Y. 2001.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7(3), pp. 277-303.
- Soesastro, Hadi. 1998.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4(1), pp. 3-54.
- Suryahadi, Asep, Wenefrida Widyanti, Daniel Perwira, and Sudarno Sumarto. 2003. "Minimum Wage Policy and its Impact on Employment in the Urban Formal Sector."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9(1), pp. 29-50.
- Waslin, Mike. 2003.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39(1), pp. 5-26.

## ● ● 통계자료

중국통계청. <http://www.stats.gov.c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http://laborsta.ilo.org/>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IHS Global Insight. <http://www.ihsglobalinsight.com/>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IMF. Direction of Trade.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Cross-Country Fiscal Monitor.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sian Development Bank. 2009. Key Indicators.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8.

EIU. Data tool.

인도네시아 통계청 <http://www.bps.go.id>

## The Indonesian Politics and Economy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Ki Tae Sohn, You Jin Baik, and Min Hee Kim

---

Recently,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community exhibited increasing interest concerning Southeast Asia, a dramatic increase in trade and investment has been observed with the region's largest economic power: Indonesia.

However, understanding Indonesia's present circumstances must be predicat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past history; especially the part concerning the impact of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wrought by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90s that directly influenced the shaping of the country's pres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is study begins with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Indonesian economy in Chapter 2, followed by an outline of political changes in Chapter 3 that will serve as background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economic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country.

The politics during this timeframe can be divided into a period of chaos consisting of Habibie, Wahid, and Megawati presidencies; followed by a time of stability after the inauguration of Susilo Bambang Yudhoyono as president

in 2004 and his reelection in 2009. This section contains details on constitutional revision, local autonomy, various separatist movements, and terrorist activities.

Chapter 4 narrates the situatio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followed by changes in policy concerning banks, labor laws, and corruption. As insolvency of loan assets in the banking sector increased, the government of Indonesia thus established the IBRA as an organ to push forward efforts for restructuring in the banking sector. Though the issuance of national bonds in massive amounts in the initial phase led to concerns over creating unbearable pressures on the budget, the timely rise in oil prices greatly mitigated the danger of such pressure. Instead of letting inefficient state banks to go bankrupt or turn them over to the civilian sector, they actually ballooned to unprecedented proportions during the ‘restructuring’, which meant the restructuring effort was incomplete. The IBRA was dismantled earlier than expected, and though the Indonesian government set up a depository insurance system to prevent the onrush of withdrawal requests seen during the Asian forex crisis, structural weaknesses mean that moral hazards would remain for the foreseeable future.

It was also during this period that Indonesia’s labor laws became friendlier for ordinary workers, centered on Labor Law 13/2003. The law may have become worker-friendly, but whether it indeed is friendly in application remains to be seen, pending further research. Yet considering that the business community tried to change the law in 2006, it does appear that the law became friendlier towards workers in actual implementation. In addition to legal changes, the minimum wage does not lag too far behind the average wage in Indonesia, and has been increasing faster rate than the later. All of these signs lead the author to conclude that the labor market in Indonesia is changing in a direction more favorable for workers. There is a caveat to all

this, however, as labor laws and minimum wage apply to only a third of the entire work force in Indonesia, meaning the impact of the law on the entire working population is relatively low.

The issue of cleaning up corruption has been discussed and debated constantly since the Habibie regime, leading to intermittent punishment of certain corrupt officials. On the other hand, Yudhoyono has been active and very consistent regarding elimination of corruption, and his inauguration has brought about expansion of efforts against corruption. Yet official action against corruption has so far been limited to punishment of persons linked to corruption, without creation of an organized system for preventing it. Some measures were indeed taken, however, such as improvements in the accounting system and wage hikes for civil servants. The level of corruption in Indonesia is expected to decrease with greater systemization of efforts to root out corruption.

Chapter 5 summarizes the previous chapters, based on and briefly considering ways to intensify investments in Indonesia.

#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이재영 · 이시영 · 두게르 간바타르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자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머지 않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4배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몽 경제 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몽골의 전략 환경, 경제구조 및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KIEP 대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9월 발행    정가 7,000원 / 196면  
ISBN 978-89-322-2176-2 / 978-89-322-2064-2(세트)

• KIEP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KIEP 최근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백유진·김민희
-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박영호·허윤선
-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이시영·두게르 간바타르
-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남호선
-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이시영
- 10-01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성한경·이철원·오태현
-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 권 율·정지선
- 09-02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 이순철·송영철
- 09-03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 윤창인
- 09-04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 김양희·김은지
- 09-05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 Silviu Jora
- 09-06 T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András Inotai
- 09-07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 손기태·김민희

- 
- 09-08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자와 해외 펀드의 환헤지 행태를 중심으로 / 허 인·박영준
- 09-09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 방호경
- 09-10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손기태·김민희
- 09-11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김준동·김정곤·윤상철·김봉근
- 09-12 중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영관·김상원·김지연·이성훈·이유신·정기철
- 09-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전략 / 윤성학·김일겸·노형복·변현섭·오영일·홍성혁
- 09-14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 이재영·고재남·박상남·이지은
- 09-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화
- 09-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아시아: 경제·에너지·환경
- 08-01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 이창영
- 08-02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 정재완·방호경
-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과제 / 정형곤·나승권
- 08-04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정성춘·이형근
- 08-05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 김한성·이재호·백유진
- 08-06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 방호경
- 08-07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 김양희·정성춘·정지원·이형근
-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 윤창인
-

## **손기태(孫基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학

University of Georgia 경제학과 졸업

LSE 경제학 석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sohn@kiep.go.kr)

### **저서 및 논문**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09)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 산업비교 분석』(2009) 외

## **백유진(白有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동남아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現, E-mail: yjbaek@kiep.go.kr)

### **저서 및 논문**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공저, 2009)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공저, 2008) 외

## **김민희(金玟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現, E-mail: mhkim@kiep.go.kr)

### **저서 및 논문**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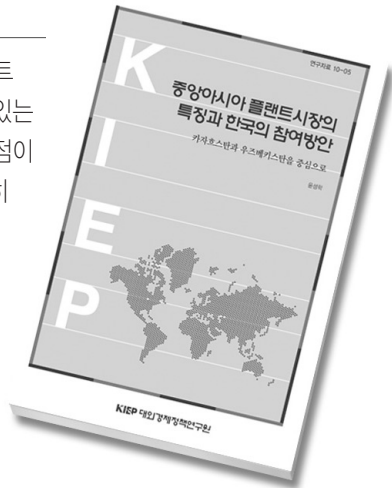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 산업비교 분석』(2009) 외

# 중양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윤성학

중양아시아 플랜트시장의 매력은 플랜트 수주를 한국의 자원개발과 결합할 수 있는 패키지전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양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양아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중양아시아 국가들은 상대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부문을 파악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10월 발행    정가 5,000원 / 98면  
ISBN 978-89-322-2178-6 / 978-89-322-2064-2(세트)

• KIEP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 원		1만 2천 원

\*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	S 발간물 일체	A 반년간지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Policy References 10-06

# The Indonesian Politics and Economy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Ki Tae Sohn, You Jin Baik, and Min Hee Kim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변화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치 및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정치 및 경제 변화, 특히 은행, 노동법, 부패척결을 개관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21793 94320  
ISBN 978-89-322-2179-3  
ISBN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